



아랍 민중 반란
혁명은
계속되고 있다

▶ 8~10면

일본 핵 재앙
‘안전한’
방사능 물질은 없다

▶ 6면

유로존의 위기
긴축 반대 투쟁의
전망과 과제

▶ 11면

카이스트와 무한 경쟁
경쟁 없는 교육은
불가능한가

▶ 12면

발행인_ 김민식 편집인_ 김재현
인쇄인_ (주)아이피디 이승철
등록번호_ 서울다08179 (격주간)
등록연월일_ 2009년 1월 12일
주소_ 서울시 중구 회현동2가 57-1 2층
전화_ 02-777-2792 팩스_ 02-777-0211
제보_ 02-777-2791 E-Mail_ left21@left21.com

ISSN 2005-8217
9 772005 821003 67

Left21.com

2011년 4월 23일 ~ 5월 6일 | 제55호 | 값 1,800원

리포트21

추락하는 이명박에 맞서

단결해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임금 인상
물가 통제
등록금 인상 철회
핵발전소 폐쇄

▶ 관련 기사 3면

이렇게 생각한다

고통과 분노를 저항으로 폭발시키자

전 세계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의 날, 메이데이(5월 1일)가 올해로 1백 21주년을 맞이한다. 메이데이는 들불처럼 타올랐던 1886년 미국 노동자들의 8시간 노동제 쟁취 파업을 기념하는 것에서 시작됐다.

당시 앞장서 투쟁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당한 어거스트 스파이스는 감명 깊은 최후진술을 남겼다. “우리를 교수형에 처해 노동운동을 근절시킬 수 있다고 정말로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하시오! 당신들이 여기서는 불똥 하나를 짓밟으려 하지만, 저기 당신들 뒤에서, 앞에서, 또 도처에서 불길이 활활 타오릅니다. 당신들은 그 불을 끄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불길은 오늘날 아랍 민중의 혁명과 반란에서도 활활 타오르고 있다. 따라서 올해 메이데이는 이집트와 튀니지의 노동자들이 잔악한 독재정권을 몰러나게 한 일을 축하할 기회다. 또, 리비아 폭격 같은 제국주의의 간섭을 뚫고 아랍 노동자·민중의 중단 없이 혁명을 밀고나가길 바라며 연대를 표할 기회다.

이윤을 위해 핵발전을 고집하다가 끔찍한 재앙을 부른 일본과 한국, 세계 지배자들에게 항의하고 핵발전소 폐쇄를 요구할 기회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이번 메이데이는 고장 난 자본주의가 낳은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는 자본가와 통치자들에게 노동자들의 저항 의지와 힘을 보여 줄 기회다.

빼앗긴

더구나 이 나라에서는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진행된 경제 위기 고통전가가 낳은 고통과 불만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국민소득에서 노동자들이 차지하는 몫을 뜻하는 노동소득분배율이 2004년 이후 가장 낮아졌을 정도로 노동자들은 일방적으로 빼앗겨 왔다. 저임금 노동자들은 현재 가구당 매달 평균 16만 원씩 적자를 내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연쇄적인 자살과 사망, 카이스트 학생들의 연쇄적 자살 등은 고통과 절망에 빠진 노동자·학생들의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 줬다.

무엇보다 요즘 노동자·학생 들은 무섭게 치솟는 물가 때문에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물가가 폭등하면서 가뜩이나 가벼운 노동자들의 호주머니를 텅 들고 있고 쥐꼬리만큼 올라간 임금으로는 물가를 따라갈 수조차 없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와 가난한 대학생들은 지금 턱까지 차 있던 물이 서서히 올라오는 느낌을 받고 있다.

이 상황에서 이명박은 제대로 된 대



문수영 기자

이제 부자·기업주들이 독차지해 온 경제 회복의 과실을 되찾아와야 한다.

책을 내놓긴커녕 “소비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는 말이나 하고 있다. 하반기에 전기·가스·상하수도 요금도 줄줄이 오를 전망이다. 물가 인상을 방치해서 쥐꼬리만큼 올라간 임금마저 다시 빼앗아가고 있는 것이다. 정말이지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는다.

분통 터질 일은 이것만이 아니다. 우리가 고통의 늪에서 허우적대던 지난 1년간 고위공직자 10명 중 7명의 재산이 늘어났다. 30대 기업의 영업이익은 3년 전보다 73.3퍼센트나 늘었다. 경제 위기 고통은 노동자에게, 경제 회복의 과실은 부자·기업주에게 돌아간 것이다.

따라서 이번 메이데이는 이런 고통과 분노를 저항으로 폭발시키는 기회가 돼야 한다. 최저임금과 임금 대폭 인상, 등록금 인상 반대, 물가 통제 등의 요구를 내걸고 투쟁을 선포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이미 보수 언론들도 “올해 노동자 투쟁이 거세게 불거져 나올지 모른다”며 걱정하고 있다. 오죽하면 그동안 이명박 정부와 손잡았던 한국노총 지도부조차 투쟁을 선언하고 나서겠는가.

더구나 이명박 지지율이 급속히 추락하고, 친인척 비리가 불거지는 등 정권의 분열과 레임덕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이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메이데이 결집과 투쟁 결의는 지속적인 투쟁 건설과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이명박을 심판하자며 당장의 투쟁 과제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 선거에서 민주당과 손잡으려고 투쟁의 요구를 낮추거나 타협해서도 안 된다.

강력한 투쟁을 건설해 나가는 것이 지금의 고통을 해결할 길일 뿐 아니라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도 진보적 대안을 건설하는 데 힘이 될 것이다.

우선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요구와 투쟁을 승리로 마무리해야 한다. 그러려면 힘있는 산별노조와 주요 대형노조들이 이 투쟁에 힘을 실어야 한다. 그래서 이 투쟁이 성과를 거두면 더 많은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요구와 투쟁에 나선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를 이용할 수많은 노조와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 투쟁, 시위, 파업, 점거의 물결을 일으켜야 한다. 근래 점거파업을 통해 임금을 10퍼센트 정도 인상한 이화여대, 고려대, 연세대 청소 노동자들이 우리의 갈 길을 보여 줬다. 최대한 같은 시기에 많은 노동자들이 비슷한 요구를 내걸고 투쟁 전선을 형성한다면 그 자체로 정치적 투쟁이 될 것이다.

노동자·학생의 불만과 분노가 들끓면서 자신감도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지금, 활동가들은 효과적인 선전·선동·폭로를 통해 노동자·학생의 자신감을 더욱 높여야 하며, 투쟁 승리를 위한 효과적인 대안과 전술을 제시해 지금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임금 인상 투쟁을 가로막는 온갖 거짓 논리들

박성환

정부와 기업주들은 노동자들의 과도한 임금 인상이 물가를 올리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 생활만 어렵게 한다고 공격한다. ‘과도한 임금 상승은 경쟁력을 약화시켜서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하고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임금이 인상된다고 해서 물가가 자동으로 오르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임금을 인상시키면 줄어드는 것은 자본가들의 이윤일 뿐이다. 물론 자본가들은 상품 가격을 올려서 줄어드는 이윤을 메우고자 할 수 있다. 자본가들은 이런 방식(인플레이)을 통해 노동자들의 호주머니를 텅빈다. 즉, 임금 인상이 아니라 이윤을 늘리려고 노동자 계급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기업주들의 시도가 물가 인상을 낳는 것이다.

지난 수년간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동결·삭감됐는데도 물가가 폭등한 것을 봐도 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을 낳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반대로 5인 이상 작업장의 실질임금 인상률이 2004년에 6퍼센트, 2005년에 7.5퍼센트였지만, 소비자물가 인상률은 2004년 3.5퍼센트에서 2005년 2.7퍼센트로 떨어진 바 있다. ‘노동자들의 고임금이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세계경제 위기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주요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되는 것은 오히려 실업과 소비 부진이다. 즉 실업자와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비가 줄어들어서 오히려 경제 회복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 지배자들은 ‘지금은 어렵지만 함께 힘을 합쳐 위기를 이겨내면 나중에 고용과 임금도 보장받을 수 있다’며 상생을 말한다. 그러나 임금을 삭감하고 무자비하게 노동자들을 해고해 온 자들이 ‘상생’을 말하는 것은 위선이다.

노동자들의 임금이 늘어날수록 자본가들의 이윤은 줄어들게 마련이고, 반면 자본가들의 이윤이 늘어난다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그만큼 더 많은 것을 빼앗아 간다는 뜻이다. 따라서 노동자와 기업주들이 ‘상생’하자는 것은 노동자에게 양보를 강요하는 것일 뿐이다.

투쟁하지 않으면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점점 더 적어진다. 예컨대 1987년은 한국 경제는 엄청난 호황이었지만 그해 봄에 임금은 별로 오르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7~9월 대중파업을 통해 비로소 임금 19퍼센트 인상을 쟁취할 수 있었다. 이렇듯 투쟁을 통해서만 더 높은 임금 인상을 쟁취할 수 있다.

맑시즘2011

변 · 혁 · 이 · 녀 · 야 · 만 · 이 · 나

일시 : 7월 21일 (목) – 24일 (일) | 장소 : 서울 (추후 공지)

주최: 다함께 | 문의: 02-2271-2395

맑시즘은 11번째 열리는 국내 최대 진보 포럼입니다. 해마다 국내외 활동가와 진보 인사들이 60여 개의 일파배기 주제로 강연하고, 1천5백 명에 이르는 노동자·학생·청년 참가자들이 치열하게 청중 토론을 벌입니다.

아랍 혁명이 2011년 상반기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세계 지배자들은 그것이 이란만의 일이 아닐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경제 위기의 심화 속에서 시작된 혁명의 제막,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진정한 대안은 무엇이고,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치열한 토론의 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www.marxism.or.kr

* 웹사이트에 가면 지난 10년 간의 맑시즘을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연사 | 알렉스 캘리니코스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이자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교수, 1968년 반란으로 각성한 이래 42년 동안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근거한 반자본주의 운동에 헌신해 왔다. 국내에 번역된 책만도 《무너지는 환상》, 《미국의 세계 제패 전략》, 《반자본주의 선언》, 《칼 맑스의 혁명적 사상》, 《제3의 길은 없다》, 《자본주의의 대안과 사회주의 가치 논쟁》 등이 있고, 이 밖에도 수많은 저작이 있다.

복수노조 시대, 무엇을 할 것인가

올해 7월 1일부터 단위 작업장 복수노조가 허용된다.

그런데 정부는 ‘복수노조 시행’이라는 결사의 자유를 허용하는 척하면서, 여러 노조 중에서 한 노조에만 교섭권을 부여하는 ‘교섭 창구 단일화’라는 조항을 끼워 넣었다. 이것은 소수 노조의 단체교섭권·행동권을 제약하며 복수노조 허용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린다.

지난해 시행된 타임오프 제도도 비슷했다. 정부는 역접게도 ‘노조의 자주성을 위해 노조 간부가 사측에게 월급을 받으면 안 된다’고 했지만, 지금 현대차 사측이 보여 주듯 타임오프의 본질은 노조의 손발을 묶고 통제하려는 것이다.(관련기사 14면)

그러나 타임오프 제도는 민주노총의 대다수 노동조합들을 쓰러뜨리지 못했다. 정부와 보수 언론들조차 “위법·편법적 전임자 임금 보전이 문제”라며 한탄할 정도로 이 제도는 유명무실해졌다.

이것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도입이 노동조합 운동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게 한다.

노동운동 내 좌·우를 막론해 적잖은 활동가들은 ‘복수노조 시행으로 친사측 우파 노조가 대거 등장하면서 노동조합운동은 암흑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이런 비관적 전망은 맞지 않다.

타임오프 무력화에서 보았듯이, 민주노총의 기층 노조들은 여전히 건재하다. 그래서 당장 친사측 노조가 활개칠 것이라는 전망은 과장이다.

더구나 복수노조 허용은 친사측 우파 노조에 맞서 민주노조를 새롭게 건설할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동안 (언론노조 KBS분회처럼) 한 작업장 내에 노조가 있는 경우에도 별도의 초기업단위 노조를 결성할 수 있기는 했지만, 전복 버스 사측이 민주노총 소속의 초기업단위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이 방법엔 제약이 따르곤 했다.

그래서 운수노조 버스본부가 조직 확대에 나선 것처럼, 복수노조 시행을 계기로 민주노조 건설 움직임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정부와 재계는 어떻게든 민주노조를 길들이거나 우파 노조를 건설하려고 할 것이다. 지난해 타임오프 공격 속에서도 일부 노조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예컨대, KEC 사측은 타임오프를 발미로 공세를 퍼부었고, 노조가 전임자 수를 양보하겠다고 후퇴했는데도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이 속에서 KEC 노조는 현재 “조직의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까지 내몰렸다.

교섭창구 단일화

그런데 이것은 결코 예정된 결과가 아니었다.

사실 KEC 노조는 투쟁 초기에 점거파업으로 강력한 연대의 초점을 형성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노사 간 ‘중재’를 자처하고 나선 민주당과 이를 추수한 민주노총·금속노조·진보정당 지도자들이 사태를 그르쳤다. 노동자들을 설득해 공장 점거를 해제시킨 것이다.

따라서 노동전선·사회진보연대 등 좌파들이 노조 탄압에 대응해 노동조합운동의 현장성·투쟁성·민주성 등을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다.

민주노조가 제대로 싸우지 않으면 현대중공업에서처럼 우파 노조가 득세할 수 있고, 교섭창구 단일화는 그런 우파 노조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방어막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서로의 영역에 침범하지 않는 ‘신사 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노동사회〉, 혁신네트워크 등의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것은 당장 한국노총 소속의 친사측 노조에 맞서 민주노조를 건설한 전복 버스 노동자들에게 투쟁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결국 문제는 어떻게 투쟁을 건설하며 노동자들의 자신감과 의식을 높여나갈 것인가에 있다.

노동조합의 힘은 기층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올바르게 대변하며 연대 투쟁과 정치 투쟁 등을 벌일 때 확대될 수 있다.

복수노조 시대에 활동가들은 무노조 작업장이나 친사측 우파 노조가 주도하는 작업장에서 민주노조 건설이나 노조 민주화를 위해 투쟁해야 하고, 민주노조가 있는 곳에서는 단결과 투쟁을 통해 더 많은 노동자들을 대변하고 조직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박설

갈 길을 보여 준 연세대문화 청소 노동자 인터뷰

“용기를 갖고 싸우면 승리는 옵니다”

최근 고려대·이화여대·연세대 청소 노동자들이 본관 점거파업으로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 인상을 쟁취했다. 열흘간의 파업으로 두 자릿수 임금 인상률을 거머쥔 연세대 청소 노동자 이현미(가명, 54세)를 만나 투쟁의 갈 길을 들어 봤다.

우리가 파업 하나끼리 회사가 [고소·고발과 무노동·무임금 협박에 대해] 사과까지 했어요.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회사는 사과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결국 우리에게 수그릴 수밖에 없었죠.

파업을 하고 난 뒤에 많은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우리를 알아봐 주는 것도 신기해요. 요즘 조합원들끼리 휴게실에 모이면, ‘엘리베이터에서 학생이 나한테 인사하더라’, ‘난 화장실에서 고맙다는 말 들었다’ 하는 식의 얘기를 많이 해요.

예전에는 학교가 조금만 지저분해

도 투쟁 부리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파업 기간에 며칠만 지나도 쓰레기가 차고 넘치는 것을 보면서 청소노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 것 같아요.

사실 학생들은 우리 파업을 열심히 지지해 줬는데, 정말 고마워요. 진짜 감동 받았어요.

경총이 최저임금 오르면 경제가 어려워질 거라고 했었던데, 자기네들은 백화점에서 명품을 전화로 주문해서 그러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같은 서민 임금이 올라야 경제도 나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최저임금은 제대로 오르지도 않는데 물가는 몇 배씩 뛰고 있잖아요.

정말이지 임금을 시급 5천4백 원 이상은 받아야 해요. 4천 원대 받아서는 생활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같은 엄마들은 가르쳐야 할 애들이 있기도 하고, 남편이 일을 못 하는 사람도 있어요. 최소한 생활은 할 수 있는 임금을 주면서 ‘최저임금’이라고 해야 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파업이 끝나고도 최저임금 집회에 나갔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집회에 열심히 참석하고 힘을 모아 싸울 거예요. 정규직 노동자들도

같이 힘을 실어 주면 좋겠고요.

우리 파업이 이기니까, 다른 작업장에선 미리 겁먹고 임금을 올려 준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용기가 안 날 수 있지만 싸우다 보면 승리할 수 있어요. 지금 투쟁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용기를 갖고 힘을 내면 이길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전해야 한다는 생각이 필요해요. 미리부터 ‘우리는 안 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승리는 꼭 오게 돼 있습니다.

인터뷰·정리 김종환



점거 투쟁을 통해 12.3퍼센트 임금 인상을 이룬 연세대 청소 노동자들. 이들과 함께 단호하게 투쟁해 광범위한 연대를 건설하면 승리할 수 있다.

현대차 노조의 ‘정규직 자녀 우선 채용’ 요구는 폐기돼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현대차 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장기근속 정규직 자녀 우선 채용’ 요구가 채택되고 말았다.

이제 “비정규직의 고통”, “정규직 특혜 대물림” 운운하며 현대차 노조를 비난하는 조중동은 더욱 신이 날 것이다.

물론 뱃속까지 친재벌적인 이들은 현대차 노조를 비난할 자격이 없다. 재벌과 조중동은 온갖 특권, 재산, 권력을 대물림하고 세습해 온 장본인 아니던가. 또 지난해 현대차 비정규직 점거파업을 “불법”이라고 비난하고 정규직 노조 이경훈 집행부의 실리주의 노선을 찬양하지 않았던가.

조중동은 이번 사건을 은근슬쩍 ‘정규직·강성노조의 타락’으로도

물고 있다. 현대차 등에서 곧 시작될 임단투(임금·단체협약 투쟁)를 앞두고 대기업 정규직 노조를 매도해 투쟁을 가로막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잘못된 ‘특혜’ 요구와 임단투는 구별돼야 한다.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 현대차 노조의 투쟁은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자신감을 줄 수 있는 정당하고 지지받아야 할 일이다.

그럼에도, 잘못된 ‘특혜’ 요구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것은 취업난에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과 특히, 지금도 혹독한 탄압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줬다. 이 노동자들은 지난 파업 때 연대를 외면했던 이경훈 집행부의 행태를 기억하고 있다.

이경훈 집행부는 ‘기아차·GM

대우차에서도 정규직 자녀 우선 채용이 시행되고 있다’고 변명하지만, 이것도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군 가산점제가 여성 등 군 미필자들을 차별하는 조처였던 것처럼, 정규직 자녀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도 다른 비정규직·구직자들을 차별하는 정의롭지 못한 요구다. 그래서 기아차·GM대우차 노조도 불공평한 ‘특혜’ 폐지에 나서야 한다.

물론, 1998년 현대차 사측의 대량해고 시도 이후 “정규직도 ‘여기서 밀려나면 끝장’이라는 불안감을 갖고”(〈한겨레〉) 있는 것은 사실이다. 내 자식이 비정규직으로 고통받는지 모른다는 걱정도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규직·비정규직의 단결 투쟁을 건설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식만 비정규직이 안 되게 하자’는 식의 태도를 취해선 안 된다. 지난해 비정규직 파업을 배신했던 이경훈 집행부는 일부 후진적 조합원들에 영합해 이런 협소한 안을 추진했다.

이것은 정규직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비정규직이 등을 돌리고 사회적으로 고립될수록 사측이 정규직

을 공격하기 쉬워질 것이다.

따라서 최근 현대차 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이 잘못된 안이 통과된 것은 정말 애석한 일이다.

‘특혜’ 요구안을 삭제하자는 주장은 28표가 모자라 안타깝게 부결됐다.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는 다행히 좌파 활동가가 제기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도 채택됐다.

좌파 활동가들이 미리부터 대대적으로 ‘특혜’ 요구안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정규직·비정규직의 단결을 촉구했다라면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특혜’ 요구안에 공동으로 반대하기로 한 7개 제현장조직들은 이런 주장을 리플릿·대자보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사실상 적극적인 공동 대응이라고 할 수 없었다.

이런 뼈아픈 일은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 활동가들은 이 잘못된 요구안이 철회되도록 계속 노력해야 하며 이번 대의원대회를 교훈 삼아, 독립적인 주장과 실천을 강화하며 정규직·비정규직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모승훈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성공을 위해

민주노총은 올해 메이데이에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선언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민주노동당을 통한 정치세력화가 난관에 봉착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다수의 현장 조합원들은 분열해 있는 진보정당이 단결하길 바란다. 민주노총의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진보대통합’을 뜻하는 이유다.

이 점에서 일부 급진좌파들처럼 진보대연합을 지지하지 않거나 냉소적인 것은 잘못이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왜 난관에 부딪혔는가

민주노동당은 2004년 4월 총선 때 노무현 탄핵 반대 투쟁의 열기 속에서 의원 열 명을 당선시키며 약진했다.

2004년은 파병반대 운동, 비정규직 투쟁,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 등 대중운동이 활발한 시기였다. 그런데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이런 투쟁들을 확대·발전시키는 데 주력하기보다는 의회 안에서 열린우리당과의 공조에 더 매달렸다. 자주파와 평등파 지도자들 모두 이러한 방침을 추구했다.

그리고 이것은 노무현 정부가 개혁 약속을 배신할수록 문제를 드러냈다.

노무현 정부는 이라크에 파병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했다. 양극화는 심화했고, 비정규직은 늘어만 갔다.

이에 맞서 투쟁과 대안을 건설해야 할 일부 노조 지도자들은 투쟁을 회피했고, 심지어 일부는 비리 사건에 연루되기도 했다.

그런데 민주노동당 지도자들은 이런 노조 지도자들을 분명히 비판하며 투쟁을 호소하는 데서 부족했다.

이것은 노무현 정부의 개혁 배신에 실망해 왼쪽으로 이탈한 대중을 흡수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중의 환멸을 기회 삼아 이명박 같은 우파가 권력을 잡을 수 있었다.

그런데 심상정 전 의원 등은 ‘민주노총



1997년 1월 대중파업으로 정리해고법과 반민주 악법들을 철회시킨 민주노총 노동자들은 한동안 한국 정치의 주역이었다. 이 때 얻은 정치적 자신감과 교훈이 노동자 정치세력화로 이어졌다.

당’, ‘데모당’이 문제라며 민주노동당을 더 온건화시켜 이 상황에 대처하려 했다. 국가보안법으로 탄압받는 당원을 제명시키려고도 했다.

그래서 다함께 등의 좌파가 이런 시도에 맞섰지만, 끝내 민주노동당은 분열했다. 분열의 결과로 진보 양당이 모두 약화됐고 어느 정도 더 온건해졌다.

그래서 현장 조합원 다수가 진보진영의 단결을 바라지만, 한편에선 불신도 있다.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이명박에 맞서 급진적 대안을 제시하며 투쟁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단결을 추구해야 노동자들의 사기를 높이며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반MB 범야권 연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명박 정부 아래서 벌어진 부자 감세, 임금 삭감, 물가와 전월세 폭등, 노동운

동 탄압 등에 맞서려면 민주당까지 포함하는 ‘반MB’ 민주연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다.

그래서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노회찬 진보신당 전 대표 등은 진보대연합 이후에 민주당과 선거연합하는 것을 당연히 시한다. 심상정 전 대표는 나아가 민주당과의 연립정부까지 얘기한다.

그런데 문제는 친자본주의 정당인 민주당과 연합을 하려 하면 할수록 이명박에 맞선 투쟁을 건설하는 데 제약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 노선은 지금처럼 경제위기 때문에 단호한 투쟁과 반자본주의 대안이 필요할 때, 오히려 진보정당과 노동운동이 요구와 강령을 낮추고 투쟁을 자제해야 하는 모순에 처하게 된다.

예컨대, 전북 버스 노동자 투쟁에서는 민주당이 지역 자본가들 편을 들고 있는데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민주당을 날세워 비판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참여당이 진보대통합연석회의에 참가하겠다고 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촛불을 통해서 정치사회에 새롭게 뛰어든 시민들”인 국민참여당 당원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그럼에도 그 당의 강령과 핵심 지도자들의 정치가 친자본주의적 자유주의라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이 당을 진보대통합에 포함시키기보다는 실전 속에서 이 당의 한계와 불철저함을 진보적 대중 앞에서 드러내 보여야 한다. 그리고 진보대연합을 건설해 국민참여당에 호감을 갖는 진보적 대중을 끌어당겨야 한다.

북한을 대하는 태도와 패권주의 문제

‘종북주의’와 패권주의의 문제도 진보대통합의 주요 쟁점이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종북주의’ 비판은 색깔론과 유사하며, 단결을 하려면 공통점을 앞세워야 한다고 주장

했다.

물론 ‘종북주의’ 용어는 마녀사냥 느낌을 주는 잘못된 용어다. 동아시아 군사적 긴장의 주범인 미국 제국주의보다 북한을 주되게 비판·반대하는 것도 균형 잡힌 태도가 아니다. 또 북한 지배자와 남한 노동자·민중 운동의 일부인 자주파 동지들은 구분해야 한다.

그러나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핵에 철저히 반대해야 하는 진보의 원칙에서 볼 때, 북한 정권의 3대 세습이나 핵개발을 지지할 수는 없는 일이다. 북한 체제에 반대한다고 남한 체제를 지지해서는 안 되지만, 남한과 똑같이 억압적 착취체제인 북한을 대안으로 여겨서도 안 된다.

이처럼 북한을 바라보는 견해 차이와 연립정부에 대한 찬반 등을 어쨌쩍 덮으며 세몰이 식으로 통합을 밀어붙이는 것은 패권적 태도일 것이다.

민주노동당 자주파 지도자들은 패권주의를 반성한다고 말하지만 ‘묻지마 야권연대’ 추진 과정에서 당내 절차와 비판 의견은 패권적으로 묵살해 왔다.

그렇다고 이런 견해 차이와 문제점들을 이유로 민주노동당 자주파와 연합하는 것 자체를 사실상 반대하는 진보신당 독자파 등의 태도도 적절하지는 않다.

그래서 다함께와 <레프트21>은 공동전선 방식의 진보대연합을 주장해 왔다.

그것은 각 정파가 독립성과 비판의 자유를 유지하면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행동강령 십수 개를 중심으로 단결해 대중투쟁과 선거 대안을 함께 추구하는 것이다. 자주파와 평등파의 정치·문화적 차이와 오랜 갈등의 뿌리를 볼 때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단결 방식일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급진좌파는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진보대연합이 선거공학으로 기울어 민주대연합의 부속물이 되지 않고 노동계급의 단결과 투쟁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개입해야 한다.

김문성

“민주당을 지지한 지난 세월이 후회스럽다”

이상구 전북 버스 파업 노동자/전일여객 조직부장

나는 버스 노동자로 반평생을 살아왔다. 파업 전에는 진보니 보수니 하는 것도 몰랐고, 노동조합에도 관심이 없었다.

그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뼈빠지게 일만 하며 살아왔고, 감히 정치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 과거 한국노총 시절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을 민주당에 집단적으로 입당시켜 당비를 월급에서 공제했다. 노동조합에서 조그마한 행사만 열어도 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시·도의원들이 찾아와서 급신거리고 돈봉투를 주곤 했다. 나는 그들이 시도민을 진정으로 대변하고 있겠거니 생각했다.

하지만 파업을 시작하고 모든 게 드러났다.

우리 버스 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하자,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과 시·도 의원들은 농성장에 얼굴 한번 비치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시의원·도의원들이 불법파업이라고 우리를 매도했다.

민주당 소속 시장과 도지사는 이명박 정권과 똑같은 노동정책을 펼쳐 파업 장기화를 유도했다. 민주당이 장악한 시의회도, 시민세금인 막대한 버스보조금과 노동자 착취로 부를 축적한 버스사업주들에게 질



가짜는 개편 민주당은 정치자금과 특혜 제공으로 거래해 온 자본가들을 위해 노동자를 박해하고 있다.

질 끌려다니면서 말한마디 못했다.

겨우 버스조사특위를 구성했지만 그다지 달라진 것도 없었다.

이제까지 처벌은 돈들이 하나 둘씩 들통 나니까 버스조사특위 빨리 끝내자고 한 것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었다.

무능하고 부패한 민주당과 버스 자본가들의 끈끈한 유착관계를 내 눈으로 보게 되면서 그들을 지지해 온 지난 세월이 후회스럽고 부끄럽기까지 하다.

전라도 지역에서는 이제 노동자를 대변하는 진보정당이 대안으로 자리잡아

야 한다. 이번 4·27 도의원 보궐선거에서도 진보정당이 민주당과 싸워 승리해야 한다.

버스 노동자들은 1백30일 넘는 투쟁을 해 오면서, 죽어도 이제는 절대로 과거로 못돌아 간다는 명제 아래 투쟁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떠난 과거일 뿐이다.

정년이 5개월 정도 남은 동지도 있고, 이번 투쟁을 하면서 정년을 마친 동지도 있다. 젊은 동지들도 많이 있다. 그들 모두 이번 파업을 통해 다시 태어났다. 우리는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고 믿는다.

중동 혁명 환경 문제 역사 이론 카지 주제를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조명하는 연속 강연

해외 마르크스주의 학자 초청 강연

일시 : 5월 22일 (일) 11시 ~ 6시

장소 : 서울 (추후 공지)

참가비 : 10,000원 (대학생 할인 8,000원)

주최 : 다함께

문의 : alltogether.or.kr | 02-2271-2395 | alltogether@alltogether.or.kr



11:00 ~ 12:50

아랍 혁명의 성격과 전망

제임스 앨런슨 에든버러대학교 강사, 국제정치 전공.

(《히스토리컬 마티리얼리즘》 지 편집위원, 2008~09년 요르단대학교 연구원을 지냈다.

2:00 ~ 3:50

유럽 중심주의 비판

오연 밀러 런던대학교 아시아아프리카학대학과 버백 대학 강사.

케임브리지대학교 연구교수, 조선 후기 사회·경제 역사를 전공했고, 한국 역사 기술 방법론을 연구한다.

4:10 ~ 6:00

경제 성장이 지구를 죽이는가?

가렛 데이브 브루넬대학교 부교수(정치학·역사학), 기후정의운동가.

기후변화반대운동이라는 단체의 ‘1백만 기후 일자리 즉각 창출하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 모든 강연은 영어-한국어 순차 통역이 제공됩니다.

‘안전한’ 방사능 물질은 없다

장호중

4월 26일은 1986년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25주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해까지 전세계 반핵 운동가들은 핵발전의 위험을 가장 비극적으로 입증한 이 날에 세계 곳곳에서 반핵 시위를 벌였다.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는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보다 4백 배나 많은 방사능 물질을 쏟아냈다. 이 사고로 “최소한 50만 명이 죽었고 2백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 (니콜라이 아멜라네츠, 우크라이나 국립 방사선 방호 위원회 부위원장)

그러나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폭발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재앙을 겪고 있다. 어마어마한 양의 방사능 물질이 공기와 바다, 지하수로 흘러들어 가고 있지만 일본 정부의 은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양의 방사능 물질이 유출됐는 지조차 정확히 알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사고 직후 ‘편서풍’ 타령을 하며 방사능 물질이 한반도로 날아올 수 없다고 했지만 20일 만에 한반도 남부 지방에 방사능 비가 내렸다. 엄청난 양의 방사능 물질이 바다로 흘러들고 있지만 바닷물의 방사능 수치는 단 한 번 발표됐을 뿐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와 마찬가지로 ‘수명 연장’된 고리1호기도 고장나 사람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한반도 전역이 방사능 물질에 노출된 사실이 분명해지자 이제는 ‘위낙 적은 양’이라 건강에 아무 문제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도 “인체에 영향이 없는 수준”이라며 “유엔비어나 비공식 정보보다는 정부의 발표와 대책에 귀를 기울이고 신뢰를 보내”라고 거듭했다.

과연 적은 양의 방사선은 건강에 아무 영향이 없을까?

히로시마, 나가사키

방사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장 믿을 만한 연구는 제2차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핵폭탄을 떨어뜨린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살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는 2006년에 “방사선량과 암 발생률 사이에 비례 관계가 있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아주 적은 양의 방사선에 노출되도 암 발생률이 그에 비례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주영수 한림대 의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방사선이 ‘어느 정도까지는 인체에 영향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1mSv(밀리시버트)라는 기준은 안전 기준이라기보다는 보통 사람이 1년 동안 생활하면서 피할 수 없는 방사선량이라고 봐야 합니다.

“게다가 그 정도 양으로도 1만 명당 1명



4월 18일 명동 정부 발표에 대한 신뢰는 바닥에 떨어진 지 오래다. 그러나 반핵운동이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대중의 두려움과 불만을 해결할 대중운동을 발전시킬 수 없다.

에게 치명적 암을 발생시킵니다. 한국 인구를 놓고 볼 때 4천 명이 넘는 거구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체 암 환자의 상당수는 자연 방사선 때문에 암에 걸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추가로 방사선에 노출되면 그만큼 암 발생률이 높아나는 겁니다.”

실제로 영국 스코틀랜드에 있는 핵 처리공장 인근 아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장이 가동되기 전 같은 연령대 아이들보다 백혈병 발병률이 높아졌다. 프랑스와 독일에서도 거의 같은 연구 결과들이 발표됐다.

1957년 영국 북서부의 윈즈케일 핵발전소에서 난 사고 때문에 이 지역에서 다 운증후군 발생률이 급격히 높아졌다. 여러 연구자들이 이 사고와 다운증후군 증가 사이에 “높은 상관 관계가 있다”고 발표했다. 방사선이 어느 정도까지는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대거나, 심지어 몸에 좋거나 하는 연구들은 대부분 여러가지 통계적 오류(너무 적은 대상자, 비교적 건강한 사람들만 조사하기 등)를 안고 있다. 또 그것들 중 일부는 정부와 핵 로비스트들의 지원으로 이뤄진 연구들이었다.

백번 양보해 암에 걸릴 확률이 ‘낮다’고 해도 왜 우리가 그 위험을 감수해야 할까? 많은 이들이 대안이 없지 않냐고 묻는다. 그동안 정부가 핵발전을 멈추면 온실가스를 내뿜는 화력발전을 더 해야 하거나 전기요금을 많이 올려 생활 수준을 떨어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이다. 한국에는 석유 한 방울 안 나온다는 얘기도 종종 듣는다.

그러나 대안은 있다. 그것도 지금 당장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대안 말이다.

핵 발전 - 대안은 있다

핵발전소를 완전히 없애려면 먼저 낭비되는 전력을 줄여야 한다. 보통 사람들이 전기를 아껴쓰거나 내뱉해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핵심은 산업계의 전력 사용을 대폭 줄이는 것이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엄격하게 실시되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은 사실상 역진제가 적용되고 있다. 전기를 더 많이 쓸수록 전기요금을 적게 내는 것이다.

“가정용 전력이 전체 전력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5퍼센트로 10년 동안 0.9퍼센트포인트 상승했지만 제조업의 전력 사용 비중은 52.5퍼센트로 같은 기간에 5퍼센트포인트나 높아졌다. 따라서 동절기 전력 피크의 가장 큰 원인은 기업들에 있는데도 애꿎은 국민을 문제의 원인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이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이 2010년 8월 3일 지식경제부에 제출한 ‘전력산업구조 정책방향 연구’를 보면 2008년 기준으로 한국의 제조업 부문 부가가치 대비 전력사용량은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갑절이나 된다. 따라서 이를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만 낮춰도 전체 전력 소비량의 4분의 1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일은 가능하다. 1970년대 오일 쇼

크를 맞은 미국 정부는 강력한 자동차 연비 규제 조처를 발표했다. 그리고 10년도 안돼 연비가 갑절 넘게 높아졌다.

주택과 빌딩의 단열 기준을 대폭 높이고 건설사들을 규제하면 불필요한 난방용 전기 사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수많은 저소득층 노동자들이 단열이 거의 안되는 집에서 온기를 유지하려고 불량 전열기구를 사용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이들이 사는 집에 단열 공사를 해 주면 전력 소비뿐 아니라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이런 일을 전국적으로 실행하면 수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다.

녹색 일자리

핵발전소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인 화력발전소도 대폭 줄여야 한다. 그러려면 재생가능에너지 공급 비중을 대폭 늘려야 한다.

예컨대 앞으로 10년 동안 전체 전력 생산의 4분의 3을 풍력으로 전환하려면 연간 24조 원이 필요하다. 엄청나게 많은 돈이지만 이런 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명박은 ‘저탄소 녹색성장’ 계획을 발표하며 여기에 해마다 GDP의 2퍼센트를 투자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게 20조 원이다. 지금은 그 돈이 4대강, 핵발전소 건설 등 녹색을 파괴하는데 쓰이고 있다.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니다. 삼성중공업 등 국내의 주요 조선업체들은 이미 미국 등에 풍력발전설비를 수출하고 있다.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직장을 폐쇄한 한진중공업을 정부가 인수해 풍력발전 공장으로 전환시키면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지키고 지구와 인류의 안전도 지킬 수 있다.

핵심 기술이 비슷하기 때문에 — 대형 선박의 스크류와 풍력 터빈을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 덴마크의 베스타스는 1970년대에 조선업에서 풍력발전 설비 기업으로 전환했고 독일에서는 풍력발전 기업인 지악-샤프(Siag-Schaaf)가 조선업을 인수해 노동자들의 고용을 유지했다.(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물론 이는 하나의 예일 뿐이다. 에너지 전환을 하면서 환경 파괴도 최소화하려면 에너지 생산을 분산시켜야 하고 — 이렇게 하면 장거리 송전으로 말미암은 전력 손실도 줄일 수 있다 — 다양한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소를 가장 적절한 곳에 건설해야 한다. 그러려면 지금처럼 민간 기업들에 맡겨 뒀서는 안 된다. 중앙정부 수준의 체계적 계획과 실행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며 핵발전과 핵무기 경쟁에 매달리는 이 체제와 지배자들에게 도전하는 노동계급 운동 건설의 과제를 제기한다.

한국 반핵운동의 과제

일부 생태주의자들은 재생가능에너지도 지금 수준의 전력을 공급하려면 환경을 파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대대적인 에너지 전환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조처들을 모두 실행에 옮길 수 있다면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면서도 에너지 전환을 이룰 수 있다. 민간기업들이 이윤을 위해 재생가능에너지 설비를 건설하고 이 과정에서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곤 했던 일들을 피할 수 있다.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 평범한 사람들이 각자 삶을 희생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

득력이 없다. 우리는 모든 인류가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오히려, 더 큰 문제는 앞서 내놓은 대책들을 자본주의 국가의 정부가 실행에 옮길 수 있을까 하는 데 있다. 이명박 정부는 물론이고 민주당도 이런 급진적인 정책들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짓고 있는 핵발전소들은 민주당 집권 때 승인된 것들이다.

설사 추진하려 한다고 해도 즉각 핵산업계와 거대 석유 기업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핵산

업계뿐만 아니라 석유 기업들도 달가워하지 않는 일이다. 이윤의 핵심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포춘>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기업 안에 석유 기업이 5개나 포함돼 있다는 사실은 이들이 세계 자본주의 전체에 얼마나 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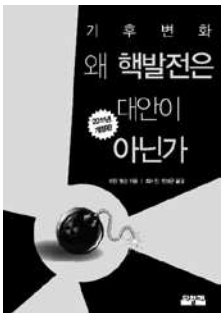
핵무기 보유에 혈안이 된 우익들도 이런 전환에 저항할 것이다. 핵무기 보유는 나라의 거대 자본들이 세계 시장에서 벌이는 치열한 경쟁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주들과 정치인들은 핵발전 정책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선거 정치를 뛰어넘는 강력한 운동이 필요하다. 단지 선거를 통해서 이 체제 안에서만 변화가 가능하다고 믿는다면 ‘핵 없는 세상’은 한낱 꿈에 머물 수밖에 없다.

8년 전 부안 주민들이 보여 준 저항과 투쟁의 정신을 오늘에 다시 되살려야 한다. 급진적 사회 변화의 전망을 다시 되살려서 이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힘을 지닌 노동계급 운동과 연결시켜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의 열쇠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그 열쇠를 제자리에 꽂아야 할 때다.

추천 소책자

2011년 개정판
기후변화
왜 핵발전은 대안이 아닌가



마틴 엠스 지음 | 최수진, 한성근 옮김 | 다함께 발행 | 3,000원

4·27 재보궐선거

이명박과 한나라당에 참패를!

최미진

4·2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정권에 대한 반감과 분노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노동자들은 전셋값과 물가 폭등, 등록금 인상 때문에 월급을 갹탈당하고 있는데 이명박은 “소비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은 “통신비가 싸다”고 엄장을 질렀다.

이명박 정부 3년간 5대 재벌의 자산은 60퍼센트 가량 늘어났고, 20억짜리 주택을 가진 부자들이 내는 종합부동산세는 1천2백만 원에서 53만 원으로 확 줄었다. 이 정부는 무상 복지는 안 된다면서 4대강 지류 사업에 또다시 20조 원을 쏟아부으려 한다.

14명째 이어지고 있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은 이 정부가 지난 3년간 노동자들에게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증명한다. 카이스트에서 연쇄 자살도 MB식 경쟁교육이 낳은 참혹한 결과다. 일본 핵재앙을 고스란히 보고서도, 정부는 핵 발전 정책을 멈추기는커녕 “불안감을 부추기는 불순세력”이 문제라고 비난할 정도로 철면피다.

최근에 에리카 김을 기소유예하고 한 상률의 주요 혐의는 덮어버렸는데도 BBK와 다스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명박에게 더너리를 낸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동반추락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맺었던 한국노총 지도부조차 이번 선거에서는 한나라당을 심판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다.

그래서 친이계조차 이명박 곁에선 장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각자도생’의 길을 찾고 있다. 한나라당 홍정욱이 ‘몸싸움’이 싫다며 한-EU FTA 비준안 처리에 기권해 당 지도부의 뒤통수를 때린 것도 이 때문이다.

이 같은 이명박의 레임덕에 속도를 더하고, 진보 지지 대중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서라도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참패해야 한다. 그리고 그럴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진보진영은 선거에서 드러날 이명박 정부의 위기를 이용해 고통을 전가하는 정부에 맞선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선거에서 표출될 반이명박 정서와 분노는 투쟁으로 건설돼야 하고, 그것만이 이명박의 반노동자·친기업 정책을 끝낼 수 있다.



민주노동당 김선동 후보의 순천 선거유세 현장 “호남 진보 국회의원 1호”가 탄생하길 바란다. 하지만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이 낄을 모순도 봐야 한다.

진보 후보에게 투표하고 저항을 건설하자

이번 선거에는 민주노동당 후보 13명, 진보신당 후보 2명, 무소속 1명이 국회의원, 시·도의원 등에 진보 후보로 출마했다. 이들은 대체로 이명박에 맞선 진보적 대안을 주장하고 있다.

이 진보 후보들에게 투표해야 한다. 진보 후보들의 당선이나 의미있는 득표는 이명박에 맞선 진보적 대안을 강화하며 선진적 노동자들의 투지를 높일 것이다.

순천에서는 민주노동당 김선동 후보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김선동 후보는 유세 초기에 민주노동당의 핵심 기반인 건설플랜트 노동조합 등 지역 내 노동조합을 돌아다니며 “계급 투표”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2005년 순천에서 현대 하이스코 비정규직 노동자 집거 투쟁을 건설한 주역이기도 하다.

우리는 “호남 진보 국회의원 1호”가 탄생하길 바라는 노동자들의 바람을 전적으로 공감한다.

김선동 후보가 민주당과 후보단일화

를 해서 야권 단일후보로 출마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지만 말이다. (아래 ‘야권연대의 모순’ 기사를 보시오.)

그 점에서 전북 전주 도의원 선거에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힘을 합쳐서 ‘전라도의 여당’ 민주당에 맞서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레프트21>을 구독하는 한 전북 버스 노동자는 “민주당에 염증을 느껴서 이제는 민주당이 전북지역에 발을 못 딛게 하겠다는 분위기”라고 노동자들의 정서를 전했다.

진보 후보인 진보신당 황정구 후보는 올바르게도 전북 버스 파업 해결을 핵심 공약으로 삼고, “버스파업 장기화로 드러난 민주당의 무능력과 무책임, 반노동 행태(를) 심판”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울산 동구청장 선거에는 진보 후보가 두 명 출마했다(민주당과 후보단일화를 통해 출마한 민주노동당의 김종훈 후보와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갑용 후보).

여기서 이갑용 후보가 민주당과의 선

거연합을 비판하는 것은 정당하다. 하지만 민주당 후보가 아니라 민주노동당 후보로 단일화된 상황에서도 김종훈 후보를 진보 후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갑용 후보의 주장은 공감하기 어렵다.

사실, 김종훈 후보를 당선시켜 한나라당을 내쫓고 싶은 노동자들의 심정도, 민주당연합에 대한 반감 때문에 이갑용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노동자들의 심정도 모두 공감할 만한 것이다.

두 후보가 단일화를 했다면 진보가 단결해 한나라당을 패퇴시키길 바라는 노동자들의 곤혹스러움을 덜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단일화가 안 된 상황에서는 두 후보 중 어느 한쪽에도 투표할 수 있다고 본다. 두 후보 모두 경력과 공약에서 진보 후보로서 큰 손색이 없기 때문이다.

한쪽을 선택하라고 강요함으로써 선거라는 부차적 문제에서 진보가 굳이 분열할 이유는 없다. 중요한 것은 이명박과 한나라당에 맞선 투쟁 속에서 단결하는 것이다.

‘야권연대’의 모순

이번 재보선의 주요 선거구에서는 ‘반 MB 야권연대’가 두드러진다. 진보정당 지도부와 주요 개혁주의 세력들은 민주당(참여당)과의 후보단일화 협상에 주력했다. 이들은 “최초의 전국적 야권연대 타결”이라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민주당연합에 반대하던 진보신당의 ‘독자파’도 이번 선거연합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고 있다.

물론 현재 개혁 염원 대중은 이명박과 한나라당에 패배를 안겨 주려고 야권연대를 긍정적으로 여긴다. 우리도 이명박이 패배하고 굴욕을 당하길 바라는 이런 심정에 심본 공감한다.

그래서 우리는 진보 후보가 출마하지 않아 마땅한 대안이 없는 곳(가령, 강원도지사 선거와 김해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는 진보적 대중이 개혁적으로 여기는 민주당·참여당 후보들에게 비판적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명박의 패배를 바라는 진보적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서다.

분당에 출마한 손학규는 민주화 운동 출

신 전력은 있지만, 이미 운동을 배신하고 14년 동안이나 한나라당에 몸담으며 온갖 우파적 정책 추진에 동참했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진보적 대중에게 ‘개혁적’으로 비칠지 의문이다. 그럼에도 이명박이 너무 싫어서 손학규에게라도 투표하겠다는 개혁 염원 청년들의 심정은 이해할 만하다.

그런데, 비판적 투표를 넘어서 진보정당이 민주당과의 전략적 선거연합에 뛰어드는 것은 이명박에 맞선 투쟁을 건설하는 데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까지 여러 선거에서 민주당은 당선 가능한 곳에선 진보정당에 후보를 양보하지 않으려 했다.

심지어 이번엔 민주당이 양보한 순천에서조차 그 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노동당 김선동 후보를 “중복주의”라고 공격하는 민주당 출신 무소속 조순용 후보를 지원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은 조순용 선거 사무실을 방문해 격려했다.

이런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민주노동당 김선동 후보는 야권연대를 강조하며

자신이 곧 ‘민주당 후보’이기도 하고 주장한다. 이것은 전라도에서 진보가 해야 할 구실 — ‘전라도의 여당’인 민주당과 구분되는 진보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 — 과는 모순을 빚을 수밖에 없다.

김 후보 자신이 비판했듯이, 전라도에서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을 앞장서 관철하고 있고, 버스파업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장본인이다.

뒤통수 치기

더구나 순천에서 후보를 양보받은 대가로 분당과 강원도지사 선거 등 핵심 선거구에서 진보정당 지도부들은 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치어리더 구실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진보정당은 민주당과 연합하기 위해 자신의 급진적 강령과 실천을 민주당 수준으로 낮추고 있다. 당장 ‘야4당 정책연합’에서 진보정당들은 ‘FTA 폐기’가 아니라 ‘재검토’, ‘핵발전소 폐쇄’가 아니라 ‘재검증’으로 후퇴하며 민주당

과 타협했다.

더구나 민주당은 분당에서 진보신당과 ‘조세형평성 실현’을 합의해 놓고 그 다음날 한나라당과 또 다른 부자 감세인 취득세 인하를 합의하며 뒤통수를 쳤다. 이 점은 진보신당도 비판한 바 있다. 그런데 선거연합에 발목 잡힌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전북버스 파업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민주당을 비판하는 논평 한 줄 내지 않았다.

게다가 정책연합의 몇몇 진보적 내용조차 실제로 구현하려면 투쟁이 필요한데, 민주당은 자본가 계급적 기반 때문에 투쟁에 호의적이지 않다.

최근에 민주당이 노조를 탄압했던 방송사 사장을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추천한 것은 민주당의 계급적 기반과 한계를 보여 줬다.

문제는 이런 민주당과의 전략적 연합을 우선적으로 여기다 보니, 진보세력의 투쟁이 발목 잡힌다는 점이다. 이것은 이명박의 반동적 정책을 저지할 실질적 수단, 즉 노동자 투쟁에 악영향을 미친다.

프랑스

니캅 금지법은 이슬람 혐오법



영국의 프랑스 대사관 앞에서 열린 니캅 금지법 반대 시위

이제 프랑스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것이 불법이 됐다. 프랑스의 무슬림 여성들 중 공공장소에서 니캅(얼굴 베일)을 착용하는 사람은 체포되거나 벌금 1백50유로(약23만4천원)를 내야 한다.

프랑스 대통령 사르코지는 이 조치가 여성을 해방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르코지는 여성 억압에 관심을 기울인 적이 없다. 그는 선거에서 극우에게 지지자들을 빼앗기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을 뿐이다.

최근 여론조사는 프랑스 파시스트 정당인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이 사르코지를 2퍼센트 차이로 앞서고 있음을 보여 줬다.

사르코지는 르펜에 맞서기보다는 우항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는 무슬림을 공격하는 것이 선거 승리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사회 통합’을 위한 것이란 말도 거짓말이다. 만약 어떤 무슬림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자기 얼굴을 가리고 싶어한다면, 처벌은 그를 집에 머물러 있도록 만들 뿐이다.

여성이 선택할 권리

프랑스 니캅 금지법은 유럽 전역에서 부상하는 이슬람혐오증의 위험을 보여 주는 최신 사례다.

많은 무슬림 여성이 히잡이나 니캅을 인종차별주의에 대한 저항이나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선택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

그들은 자신들이 굴복하지 않음을 보여 주고 싶어 한다.

사회주의자들은 니캅 금지법을 지지하는 좌파들의 논리 — 프랑스가 비종교적인 세속적인 사회라는 주장 — 를 수용하지 말아야 한다.

프랑스는 세속적이지 않다. 기독교가 여전히 지배적인 종교다. 게다가, 프랑스 국가는 종교 전체가 아니라 이슬람만 공격하고 있다.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얼굴을 가리는 것이 여성 억압을 상징하는 것이라며 금지법을 지지한다.

그러나 여성 해방이란 것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여성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여성의 몸은 오랫동안 전장이었다. 여성들은 때로는 너무 많이 노출한다고 때로는 너무 적게 노출한다고 비난을 받아 왔다.

여성이 자기가 원하는 복장이나 종교를 선택했을 때 그것을 처벌하는 법은 여성을 해방시키지 못한다. 그런 법은 억압과 편견을 강화하는 도구일 뿐이다.

출처: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번역: 김용욱



중동·북아프리카 혁명은 끝나지 않았다

주류 언론들은 중동과 북아프리카 혁명이 끝났다고 말한다. 튀니지와 이집트는 혁명 물결의 시작이 아니라 끝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동, 북아프리카와 다른 곳에서 광범한 민중은 계속 항쟁을 벌이고 있다.

튀니지와 이집트 혁명에서 영감을 얻어 그들은 빈곤, 부패와 독재에 맞서 싸우고 있다. 시리아와 예멘에서 지속되는 시위는 이런 투쟁 물결의 일부다. 지난주 이라크에서는 정부 탄압과 부패에 맞서 1백만 명이 시위를 벌였다. 이라크 보안군은 시위대를 상대로 발포해 35명이 다쳤다. 최근 몇 주 동안 부르키나 파소에서는 군과 대통령 경호부대가 반란을 일으키고 연일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 블라제 콤포오레는 육군, 공군 참모총장과 경찰청장을 해임하고 정부를 해산했다. 비례에서는 정부의 진인한 탄압에 반발해 노동자들이 파업을 조직하고 있고 기루 시위도 계속되고 있다.

반란에 휩쓸린 나라의 지도자들은 서방의 친구인 경우가 많다. 서방 정부들은 시위대를 억누르고 '안정'을 회복하는 데 이해야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광범한 사람들은 굴복하지 않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정부들은 탄압만으로 저항을 억누르지 못하고 있다. 아래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혁명국은 아랍 혁명에서 흔히 제기되는 문제들이다.



2011년 2월 이집트 혁명에 큰 활력을 불어 넣은 이집트 텔레콤 노동자 파업 투쟁

왜 아랍권에서 혁명과 대중 반란이 연쇄적으로 폭발했는가?

2009년 튀니지 청년 행상의 분신으로 시작된 반란 물결은 역사와 국가 형태상 차이를 떠나 아랍 전역을 휩쓸고 있다.

제2차세계대전 전후 민족주의 반란과 혁명으로 탄생한 튀니지와 이집트에서는 이번 반란이 정치 혁명으로 발전해 장기 집권해 온 독재자가 쫓겨났고 알제리와 예멘 정부도 대중의 신망을 잃었다.

이스라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독재가 불가피하다고 말하며 10년(아버지 바사드 통치까지 합하면 거의 40년) 이상 반민주적 정책을 정당화해 온 시리아 바사드 정부도 연일 지속되는 반정부 시위가 항쟁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다.

이집트 나세르처럼 민족주의 쿠데타로 탄생한 정권인 리비아 카다피 정부는 현재 국토 대부분을 통치하지 못하는 처지다.

사우디아라비아와 그밖에 다른 왕정국가들이 개입한 뒤에야 바레인의 왕정은 반정부 시위를 억누를 수 있었다.

심지어, 미국의 반식민지인 이라크에서도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석유 노동자들이 30년 만에 파업을 벌였다.

때로는 서방의 지원을 받아, 때로는 반서방의 기치로, 저마다 '체제 경쟁'을 벌여 온 아랍 나라들은 결국 대중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했다.

나라별로 차이점도 많지만 몇 가지 중요한 공통점도 있다.

하나는 비민주적 장기 독재다. 이집트 무바라크는 30년 동안, 리비아 카다피는 42년 동안 집권했다. 이것은 당연히 온갖 종류의 부패를 낳고 독재와 부패를 정당화하기 위한 경찰력 강화를 가져 왔다.

예컨대, 이집트 경찰은 대중의 모든 생활에 관여했고 경찰에 대들었다는 이유로 수백 명이 지켜 보는 가운데 백주대낮에 20대 청년을 구타해 숨지게 할 정도로 대담했다.

둘째는 기존 국가자본주의적 경제 모델의 실패와 신자유주의 개혁의 도입으로 최근 대중의 삶이 크게 추락한 것이다.

리비아의 1인당 평균 소득은 1만 2천 달러로 중동에서 높은 편이다. 그러나 많은 리비아인들의 삶은, 인구 절반이 하루 2달러 이하의 소득으로 연명하는 이집트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대부분의 아랍 나라에서 인구의 절반가량이 청년층인데, 이들의 실업률은 20퍼센트를 웃돌았다.

반대로, 이집트와 리비아에서 나라의 부가운데 대부분은 통치자 일가친척, 친정부 정치인과 기업인들에게 돌아갔다. 무바라크와 카다피 일가가 해외로 빼돌린 돈은 각각 7백억 달러와 3백억 달러로 추정된다. 다른 나라의 신자유주의 시장화와 마찬가지로 아랍권의 시장화도 엄청난 부패와 부조리를 낳았다.

마지막으로, 아랍권 국가들 중 다수인 친서방 국가들의 경우, 이들이 2000년대 중동을 뒤흔든 제국주의 만행 — 이라크 침략, 이스라엘의 레바논과 가자 침략 등 — 에 협력한 것은 아랍권 민중 전체의 공분을 샀다. 이렇게 모순이 무르익은 상황에서 2008년부터 시작된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는 이 지역의 위기를 더욱 더 격화시켰고, 마침내 튀니지의 한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된 항의의 시위가 아랍권 전역을 뒤흔든 민주화 요구 투쟁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이다.

아랍 혁명은 단순히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혁명인가?

최근 미국 언론들은 미국 정부가 튀니지, 이집트 등의 민주주의 단체들을 지원해 왔으며 이들 혁명의 지향점이 서구식 체제를 강화해 암시한다. 그러나 미국을 포함해 서방 정부들은 원래 아랍 혁명 물결을 지지하지 않았고 '안정'을 바랐다.

미국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은 카이로 타흐리르 광장에서 혁명 물결이 시작된 1월 25일에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무바라크 정부가 안정적이고 이집트 민중의 정당한 필요와 이익을 보장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들은 여전히 바레인과 사우디아라비아 독재 왕정이

반정부 시위를 탄압하는 데 '우려' 이상을 표명하지 않으면서 현 정부 체제 아래 '질서정연한 이행'을 요구한다. 따라서 많은 아랍 민중이 서방 정부의 뒤통은 민주화 요구에 냉소적인 것은 당연하다.

게다가, 아랍 민중은 독재 종식과 선거권 도입 이상을 바란다. 혁명에 참가한 수많은 민중에게 반독재 투쟁은 폭넓은 사회적 문제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었다.

앞서 봤듯이 아랍권에서 신자유주의의 개혁 도입 과정에는 국가와 지배층이 깊숙이 개입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도전하는 정치적 투쟁은 자연스럽지 이들이 특혜를 누리려는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예컨대, 튀니지 혁명에서 핵심 구호는 "빵과 물이 필요하지만 벤 알리는 필요없다"였고, 각 부문 노동자들은 독재자와 결탁된 경영진의 퇴진과 함께 그들의 특권적 경제 이익을 몰수하고 부를 재분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리비아 항쟁은 다른 아랍 혁명과 다르다?

리비아 혁명을 지지하지 않는 일부 진보 진영 인사들은 리비아 항쟁은 다른 아랍 혁명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물론 각 혁명은 고유한 특징이 있다. 그러나 그들이 지적하는 것은 혁명의 특수성이 아니다.

그들은 리비아가 '비폭력 시위에서 무장 투쟁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부족 간 갈등이 중요한 요소기 때문에, 알카에다 같은 '이슬

람 근본주의자', 혹은 서방 정부가 배후에 있다고 착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혁명 발생 직전 카다피는 2004년부터 반서방 제국주의 미사여구도 포기했다.

둘째, 혁명이 독재자 타도를 넘어 더 넓은 정치·사회적 요구를 심화 발전시키는 데서 노동계급 투쟁이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

그는 1996년 뱅가지의 아부 살림 감옥에서 처음 개선을 요구하는 죄수 1천2백70명을 무장화 즉결 처분할 정도로 잔인했다.

심지어 그는 1월 28일 이집트에서 1백만 명이 넘는 시위가 발생한 뒤 직접 무바라크에 전화해 걸어 격정하지 말라고 위로할 정도로 독재자의 구실에 충실했다.

리비아인들은 바로 이런 비민주적 억압에 대한 분노 때문에 일어난 것이기도 하다. 계급화된 삶 속에서 약화된 부족적 정체성 때문에 반카다피 항쟁에 참가한 것이 아니었다.

아랍 혁명은 계급과 상관 없는 새로운 혁명인가?

일부 좌파 — 대표적으로 《제국》 저자인 안토니오 네그리 — 는 노동계급이 중요한 구실을 하지 못했으면서 아랍 혁명은 계급적 동력이 중요한 구실을 했던 '20세기 혁명들과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아랍 혁명에 노동계급 외에 다른 사회집단이 참가했고 중요한 구실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모든 대중 혁명의 특징이었다. 인구 압도 다수가 참가하고 지지해야 기층 혁명이라 불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두 가지 점에서 이번 혁명은 계급적 내용을 가진다.

첫째, 혁명이 당면 목표 — 독재자 퇴진 — 를 성취하는 과정에서 튀니지에서는 거의 처음부터, 이집트에서는 무바라크 사임 직전인 2월 초부터 노동계급 조직과 계급 투쟁(파업 등)이 결정적 구실을 했다.

둘째, 혁명이 독재자 타도를 넘어 더 넓은 정치·사회적 요구를 심화 발전시키는 데서 노동계급 투쟁이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

노동계급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일관되게 발전시키며, 그 투쟁을 제국주의와 자본주의 자체에 도전하는 연속혁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혁명을 승리로 이끈다. 민주적 총학생회 결성 등)와 생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이는 데 영감을 줬다. 이집트에서 독립노조를 결성한 노동자들과 이들을 지지하는 좌파

들이 중심이 돼 민주노동자당을 결성한 것은 앞으로 노동계급의 정치적 영향력이 더 강화될 가능성을 보여 준다.

앞으로 아랍 혁명에서 정치적 요구가 다양한 사회적 요구와 결합 발전하고 그 요구들을 실제로 성취하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노동계급이 더 적극적 구실을 해야 할 것이다.

노동계급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일관되게 발전시키며, 그 투쟁을 제국주의와 자본주의 자체에 도전하는 연속혁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혁명을 승리로 이끈다. 민주적 총학생회 결성 등)와 생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이는 데 영감을 줬다. 이집트에서 독립노조를 결성한 노동자들과 이들을 지지하는 좌파

김용욱

나토에 대한 리비아인들의 의심이 커지다

전투가 질질 끌면서 지속되자 서방 개입에 대한 환대가 깊은 의심으로 바뀌고 있다.

리비아 혁명가들은 카다피 대령의 독재에 맞서 투쟁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민족자결권을 위해서도 투쟁하고 있다.

나토는 카다피 정권 주요 근거지인 시르테에서 반군을 버렸다. 나토가 '공공 지원'을 돌린 중단하면서 반군들은 카다피군의 반격에 노출됐다.

'공공 지원'이 중단된 것은 폭격 비행단 책임자가 바뀌었기 때문이었다. 나토는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의 처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반군들은 시르테에서 후퇴하면서 이렇게 성토했다. "신을 믿었을 때 우리는 승리에 승리를 거듭했다. 나토를 믿자 우리는 계속 지고 있다."

혁명 초기에 반군들은 권총과 화성기를 들고 전투에 임했다. 그들이 승리한 것은 카다피 군대가 붕괴하고 이탈리아가 신속한 덕분이었다.

그러나 나토 폭격이 시작되자 카다피군이 이탈리아 발생이 중단됐다. 또, 투쟁이 갈수록 군사력을 겨루는 쪽으로 변했다.

비록 서방 개입 때문에 리비아 혁명이 위기에 처했지만 리비아 일부 지역에서는 (나토 전투기의 도움없이) 혁명 세력이 전진하고 있다.

트리폴리 혁명가들 — 주로 수도의 노동계급 주거지에서 활동하는 — 은 카다피군 초소에 대한 소규모 공격들을 감행했다.

아랍 반란 물결 소식 : 예멘

4월 17일에 수십만 명이 예멘 방방곡곡에서 시위를 벌였다.

예멘 대통령 알리 압둘라 살레는 이슬람 관습에 따라 여성이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응해, 여성 수천 명이 남성들과 함께 정부부서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예정들은 예멘 민주화 운동에서 중요한 구실을 해 왔다. 반정부 운동이 처음 시작됐을 때 여학생들은 대학에서 반정부 행

〈가디언〉은 트리폴리에서 비밀리에 활동하는 한 반군과 인터뷰했다. 그는 자기 그룹이 트리폴리 지역의 초소들을 공격해 카다피 진영 민병대를 사살하고 무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카다피 정부는 밤에 트리폴리에서 들리는 총성은 축하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군들은 "매일 밤 공격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반군들은 종종 자신들이 초소 경비를 서던 '소년들'을 설득해 초소에서 이탈리아 도둑 만들 때도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하룻밤 경비를 서고 겨우 40디나르를 받습니다. 그들은 더는 이 더러운 짓을 못하겠다고 불평을 토합니다."

혁명은 또한 서부 산악 지대를 통해 튀니지 혁명과 접촉함으로써 활력을 얻고 있다. 반군은 서부 산악 지대에서 최대 도시인 진탄과 날루 — 베르베르족이 주로 거주한다 — 에서 카다피군을 격퇴했다.

카다피 정부는 베르베르족들을 차별 대우해 왔다. 리비아 베르베르족들은 튀니지 베르베르족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 카다피 정부는 이 지역 산악 전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탈한 조직된 육군

위에 처했지만 리비아 일부 지역에서는 (나토 전투기의 도움없이) 혁명 세력이 전진하고 있다.

트리폴리 혁명가들 — 주로 수도의 노동계급 주거지에서 활동하는 — 은 카다피군 초소에 대한 소규모 공격들을 감행했다.

아랍 반란 물결 소식 : 예멘

4월 17일에 수십만 명이 예멘 방방곡곡에서 시위를 벌였다.

예멘 대통령 알리 압둘라 살레는 이슬람 관습에 따라 여성이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응해, 여성 수천 명이 남성들과 함께 정부부서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예정들은 예멘 민주화 운동에서 중요한 구실을 해 왔다. 반정부 운동이 처음 시작됐을 때 여학생들은 대학에서 반정부 행

동을 조직하는 데서 결정적 구실을 했다. 미국과 이 지역 독재자들은 튀니지와 이집트 혁명을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랐다.

지금 걸프협력회의(이하 협의회)는 예멘의 권력 이양을 주장한다. 협의회는 이 지역 정부들로 구성돼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협의회는 살레가 물러나길 바라지만 현 정권이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를 바란다.

미국 정부는 예멘을 '테러와의 전쟁'의

이 나라 정부들은 파견군대가 전투병

구실을 하진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직 그 어떤 반란군도 서방 지

상군 파병을 받아들일려 하지 않는다. 리비아 혁명가들은 10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탱크 등 늑손 군장비를 보수하고 있다. 그들은 노획한 로켓 발사대와 기타 무

기들을 합쳐 트럭에 설치했다. 지금 과도국가위원회는 항쟁 속에서

등장한 지도자와 옛 카다피 정부 인사들로 분열해 있다.

서방이 약간의 무기를 친서방 인사들에게 제공하면서 항쟁 지도자들은 주변화했다.

나토는 반군들이 카다피의 해와 동결 지금을 이용하고 무기를 구매하는 것을 아직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반군들이 이

것이 나토가 리비아 분단을 낳을 휴전 협상이나 외국인 파병을 정당화할 구실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어느 쪽이든 리비아인들과 리비아 혁명에 재앙이기는 마찬가지다.

리비아인들은 지금 서방의 통제 시도를 물리치면서, 동시에 카다피 정부에 맞선 항쟁을 벌여야 하는 처지다.

리비아 혁명의 미래는 이 지역을 휩쓰는 혁명 물결에 참가하는 사람들과 직결돼 있다. 서방의 개입이 혁명을 도울 것

이란 생각은 위험한 환상이다.

출처: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번역: 김용욱

새로
나왔습니다

아랍 혁명 특집호 : 세계를 뒤흔든 아랍 혁명 — 의미와 전망

아랍 혁명의 귀환 _ 알렉스 캘리니코프
이집트 혁명의 제1막 _ 람 알라만
독자 정권의 무명을 판 사람들 _ 람 알라만
튀니지의 민중 혁명, 세계대 모나코
리비아 혁명, 어떻게 볼 것인가? _ 김용욱

아랍 민족주의의 부상과 좌절 _ 람 알라만
나세르에서 무바라크까지 _ 에릭 푸터
이집트 민주화 운동 _ 람 알라만
이슬람주의의 과거와 현재 _ 사메 나기브
21세기 혁명의 현실성을 보여 준 아랍 혁명 _ 김진익

장점:
다시 불거지는 유럽 재정 위기 _ 이창구
마르크스주의의 고전 읽기: 〈프랑스 내전〉
파리 코연, 최초의 노동자 국가 _ 이현주

정기구독료

1년 64,000원 | 2년 120,000원 | 3년 180,000원 | 5년 300,000원 | 7년 420,000원 | 10년 600,000원

구독 문의 | 전화 02-2268-7608, 이메일 manx21@manx21.or.kr, 웹사이트 http://www.manx21.or.kr

아랍 혁명의 불길에 휩싸인

시리아 국가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대규모 시위가 시리아 지배계급을 뒤흔들고 있다.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다른 아랍 지배자들처럼 중동을 휩쓰는 반란 물결에 직면해 자기 자리를 지키려 한다. 그래서 그는 시위가 벌어진 2주 동안[이 글은 2주 전에 쓴 것이다] 60명을 죽였다.

애초에 시리아 정부는 팔레스타인인들이 시위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고 나중에는 이스라엘과 미국 첩자들이 사주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이런 말바꾸기는 시리아 국가의 모순을 보여 준다.

서방 정부와 언론들은 시리아를 ‘불량 국가’로 분류한다.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관심이 있고 테러리즘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다.

그러나 불과 2주 전, 미국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은 알아사드 대통령을 개혁가로 칭송했다.

대다수 1천7백만 시리아인 — 그중 절반이 19세 이하 — 은 갈수록 더 가난해지고 있다. 실업률은 25~30퍼센트에 이른다. 국내총생산은 하락하고 있고 석유 자원도 곧 바닥이 날 것이다. 바트당의 권력을 유지시켜 준 방대한 관료, 군, 보안 기구들은 더는 유지되기 힘들다.

시리아 경제는 거의 파산상태다. 최근 가장 큰 시위들은 주로 남부 도시인 다라에서 발생했는데, 다라 주민들이 주로 소득을 얻는 농업은 지난 몇 년 동안 가뭄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항쟁은 다마스쿠스, 알레포, 홉스와 하마 등 다른 대도시로도 확산되고 있다. 또, 북부의 쿠르드족은 반란에 준하는 행동에 돌입했다.

전직 언론인 로버트 피스크는 이렇게 말했다. “고문과 무카바라트(비밀 경찰)의 심문이 지속되고 있다. 시리아에서 자유란 사막의 오아시스만큼 찾기 힘들다. 의회란 정부를 지지하는 서커스단일 뿐이다.”

서커스단

시리아 정부는 이슬람의 알라위파(시리아 인구의 12퍼센트에 속한 소수의 군장교들에 주로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번 시위에는 다양한 종파들이 참가했다.

시리아와 서방 관계는 불편했다. 시리아는 이라크 이후 차기 표적이기도 했다. 시리아는 동으로는 미국이 점령한 이라크에, 서로는 이스라엘에 접해 있다. 시리아 역사는 제국주의 지배의 역사이자 그에 대한 대응의 역사였다.

제1차세계대전 당시 오토만 제국이 붕괴하자 영국과 프랑스는 중동 지역을 분할했다. 1920년 파이잘은 아랍 반란을 일으키고 다마스쿠스에서 아랍 왕국의 건국을 선포했다. 프랑스군은 이 반란을 진압했다.

프랑스 뱅크는 메이살른 전투에서 아랍 기병들을 몰살시켰고 영국은 서둘러 파이잘을 바그다드로 데려갔다. 이곳에서 파이잘은 이라크 국왕이 됐다. 그 다음 25년 동안 프랑스 식민 정부가 시리아 지역을 통치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프랑스에 맞서 저항했다.

1925년과 1926년에 프랑스 식민 통치에 반대하는 대규모 반란이 발생했다. 프랑스는 다마스쿠스를 두 번이나 폭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간신히 진압했다.

1946년에 마침내 또 한 번 민중 항쟁이 일어나 프랑스군을 몰아냈다.

첫번째 독립 정부를 구성한 지주와 상인들은 곧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자 파업에 직면했고, 농민들도 반란을 일으켰다. 급진 정당들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했다.

1954년 아랍 최초로 공산당원이 의회에 진출했고 아랍권이 단결해 제국주의



3월 25일 시리아의 청년 실업자들이 벌인 반체제 시위

를 몰아내자는 바트당의 민족주의적 주장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높아졌다.

바트당은 제국주의의 중동 개입을 혐오하는 중간계급 지식인, 전문직 종사자, 학생, 상인과 기타 기업인들로 구성됐다. 그들은 아랍 세계의 통일, 주요 산업 국유화, 제국주의 반대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권력을 잡은 후 바트당은 갈수록 자신이 장악한 국가 기구와 자신을 동일시하게 됐다. 한편, 중동 다른 나라에서도 바트당이 등장했다. 이 중 상당수는 오늘날 남아 있지만, 그들은 창립 당시의 급진 이데올로기와 완전히 선을 그었다.

시리아 바트당도 범아랍 혁명이 아니라 기존 영토의 확장과 국가 이해관계의 수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1958년 시리아 바트당은 이집트 군부 지도자 가말 압델 나세르에게 시리아와 이집트로 구성된 연합아랍공화국의 대통령이 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1961년 시리아 자본가들이 나세르의 토지 개혁과 은행·산업 국유화 계획에 반발하면서 연합아랍공화국은 무너졌다.

반제국주의 미사여구

다마스쿠스에서 쿠데타가 일어나 자유주의적인 민간인 정부가 등장했다. 그러나 1963년 또 한 번의 쿠데타로 바트당이 재집권했다.

그들은 소련을 분단 국가자본주의 경제 모델을 반제국주의 미사여구와 성장하던 팔레스타인 게릴라 운동에 대한 지지와 결합시켰다.

이것은 중동 지역에서 미국 제국주의

의 전진기지인 이스라엘과의 끊임없는 긴장관계를 심화시켰다. 1967년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시리아와 다른 아랍 나라들을 패배시켰다. 이스라엘은 시리아 영토인 골란고원을 차지했다.

이 패배는 바트당 내에서 군부의 영향력을 높였다. 현 시리아 대통령의 아버지이자 당시 바트당 내 군부 핵심 인사였던 하피즈 아사드는 1970년 내부 쿠데타 — 이른바 ‘교정 혁명’ — 를 일으켰다.

아사드는 전임자의 국가자본주의 정책과 거리를 두면서 경제를 부분적으로 자유화했다.

시리아 현대사는 이스라엘과 끝없이 충돌한 역사다. 그러나 동시에, 시리아 정부는 팔레스타인인들을 지지한다고 온갖 말잔치를 늘어놓지만 번번이 팔레스타인인들을 배신했다.

1973년 이집트와 시리아는 빼앗긴 땅을 되찾으려 이스라엘을 상대로 다시 전쟁을 벌였고 또 패했다.

그러나 1976년 시리아는 미국의 명령을 받아 레바논에 파병했다. 시리아군은 잔인한 파시스트 집단이자 팔레스타인인과 무슬림에 맞서 싸우던 팔랑헤의 편을 들었다.

그해 시리아군은 팔랑헤 기독교 우익 민병대가 베이루트의 텔 알자타르 캠프에서 팔레스타인인 2천 명을 살해하는 데 공모했다.

시리아 정부는 내부 저항을 혹독하게 탄압했다. 저항 중 가장 강력한 것은 1980년대 나타난 이슬람주의 무장 집단이었다. 1980년에는 무장 저항과 함께

대규모 파업과 시위가 벌어졌다. 알레포 주민 가운데 3분의 2가 몇 주 동안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같은 해, 시리아 정부는 동부 사막 지역 근처의 타드무르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면서 1천 명을 죽였다. 1982년에는 하마에서 봉기가 발생했다. 아사드는 “그들은 자신이 저지른 짓에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고 선언했다.

그는 대학살로 항쟁을 억눌렀고 불과한 달 동안 수만 명을 도륙했다. 하마시 거주지 전체가 파괴됐다. 정부의 목표는 모든 반대파에게 겁을 주는 것이었다.

1980년대 시리아 경제는 정체했고, 시리아를 지원해 온 초강대국인 소련은 쇠락했다. 그러나 1991년 걸프 전쟁은 시리아 국가가 서방 열강들과 손을 잡을 기회를 제공했다. 시리아는 1991년 이라크를 상대로 미국이 벌인 걸프 전쟁을 지지했고 미국 정부는 시리아 정부의 입장을 환영했다.

시리아 정부의 변화로 미국 정부의 지원이 재개되진 않았지만 유럽연합과 사우디아라비아와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경제는 별 볼 일 없지만 석유 생산 증가로 그럭저럭 성장했고, 시리아 지배계급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그러나 대다수 평범한 시리아인들은 이런 변화에서 이득을 얻지 못했다.

‘다마스쿠스의 봄’

2000년 하피즈 알아사드가 죽자, 그의 아들이 바샤르가 대통령 자리를 계승했다. 초기에 바샤르는 ‘다마스쿠스의 봄’으로 알려진 정치와 경제 자유화를 약속했다.

그러나 인권 유린과 정치 활동가 탄압은 계속됐다. 9·11 이후 아사드는 부시

정부에 자신이 하마에서 한 짓을 상기시키면서, 그것이 부시가 따라야 할 ‘성공적 모범’이라고 주장했다.

오늘날 시리아에는 정치범 수백 명이 수감돼 있고, 인권단체들은 고문인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서방 정부들은 시리아 정부의 고문 행각을 활용하기도 했다. 미국 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의 일환으로 고문 중 일부를 시리아에 ‘외주’를 줬다.

한때 조지 부시는 시리아를 ‘악의 축’에 포함시켰지만, 곧 부시 정부는 자신이 잡은 사람들을 시리아 감옥으로 보냈다.

CIA가 납치한 사람들 중 일부는 ‘팔레스타인 지부’로 알려진 시리아 감옥들로 보내졌다. 캐나다 시민인 마헤르 아라르는 뉴욕에서 납치된 후 시리아로 보내졌다. 그는 시리아 감옥에서 거의 1년 동안 고문받은 뒤에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아무도 그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두 나라 정부 간 관계는 2005년에 또 변했다. 미국 정부는 레바논 총리 라피크 하리리 암살이 시리아 짓이라고 주장했다. 하리리 암살은 이른바 ‘백향목 혁명’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레바논에서 연이어 시위가 벌어지면서 시리아는 레바논에서 철군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 정부는 시리아에 경제 제재를 선포했고 시리아 바트당 정부가 이라크 저항세력을 지원한다고 비난했다. 2008년 미군의 공격으로 시리아인 8명이 죽기도 했다.

시리아 정부는 팔레스타인 집단과 ‘외국인 전사들’을 탄압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시리아 지배자들은 쉽지 않은 줄타기를 해 왔다. 지금의 반란은 그것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

1백만 명이 반정부 시위를 벌이다

4월 15일 시리아에서 1백만 명이 시위를 벌였다.

부패와 비민주주의에 대한 분노가 거리에서 폭발했다.

시리아 정부는 잔인하게 시위대를 진압했다. 일요일(4월 17일)에 시리아 보안군은 시리아 제2의 도시에서 30명을 살해했다.

지금까지 정부 탄압은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나오는 것을 막는 데 실패했다.

시위대의 압력을 받아 시리아 대통령 아사드는 48년 묵은 긴급법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출처: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크〉

번역 김용욱





사진 출처: Jon Stone

3월 26일 런던에서 벌어진 긴축 반대 시위 “모든 긴축을 중단하라. 우리는 너희들이 만든 위기의 대가를 치르지 않을 것이다”

유로존의 위기와 긴축 반대 투쟁

다음은 얼마 전에 있었던 국제사회주의경향(ST) 주요 단체 대변자들 사이의 대담을 정리한 것이다. 지난 호에 실은 '아랍 혁명과 국제 좌파의 과제'에 이어서 이번 호에는 유럽의 긴축 반대 투쟁에 관한 부분을 실는다. 한국 관련한 최일봉(다함께 국제연락간사)의 말은 생략했다. 녹취와 번역에는 다함께 회원인 박준규가 수고해 줬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SWP

영국에서는 근대 복지국가 형성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삭감 계획이 발표됐다. 이에 대한 반감의 정도는 지난 3월 26일 집회가 잘 보여 줬다. 집회에 50만 명이 넘게 참가했다. 영국 역사상 가장 큰 시위 중 하나였다. 문제는 이 분위기가 산업투쟁으로 이어질 것인가 하는 점이다. 현재 몇몇의 산업행동이 벌어지고는 있다. 타워 햄릿에서 대학강사노조 투쟁 등이 그것이다. 우리 SWP 당원들의 구실이 컸다. 이런 상황은 한편에서는 잠재력을 보여 주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운동의 주류가 투쟁으로 나가는 것을 꺼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노조 지도자들이 급진적인 발언을 하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다. 총파업으로 나아가는 것과 비슷한 투쟁을 조직하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노조 지도자들의 말과 실천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잘 안다. 우리 앞에 놓인 큰 과제는 노조 지도자들에게 압력을 가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공동 투쟁을 조직하게 하는 것이다. 6월 말에 투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두고 봐야 한다.

집회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지난해 연말의 학생시위가 큰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학생운동은 크리스마스 이후 그전 수준으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 그럼에도 학생운동의 전투성이 이번 집회, 특히 경찰과의 충돌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다.

슈테판 보르노스트 독일 마르크스21

독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가을을 기대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독일경제가 상대적으로 건전하다는 것이다. 실업률도 높지 않다. 실제로는 문제가 많지만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 또 하나는 긴축이 중앙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공공부문 전체 예산을 삭감하는 식이 아니라 지역의 도서관이나 학교를 폐쇄하는 식이다. 결과적으로 저항은 전국적이지 아니라 지역적으로 일어났다. 이것은 좌파당(Die Linke)이 지역에 뿌리 내리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러나 거대 노조들은 정부의 수출지향적 경제 전략을 지지하고 있다.



사르코지(프랑스)와 메르켈(독일)의 경제 위기 고통선거 정책은 실패하고 있다.

한편 독일에서 우리는 반핵 운동의 거대한 부활을 목도하고 있다. 지난 토요일 25만 명이 시위에 참가했다. 지난 30년 동안 가장 활력있는 운동이다. 10만 명이 발당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여 정부가 계획한 핵발전소의 절반이 취소됐다. 이 운동은 사회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다.

유럽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말하고 싶다. 아일랜드 은행이 파산 위기에 놓이면 독일이 지원하기로 약속했다고 언론이 크게 보도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결과는 정상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다른 나라보다 임금이 높은 나라에 벌금을 물리는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지만 이 시스템이 현실화되면 많은 나라들의 공공부문이 공격을 받을 것이다.

파노스 가르가나스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

SEK 두 가지를 말하려고 한다. 하나는 슈테판이 말한 유럽정상회담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에 대해 유럽연합이 계획한 구제금융 패키지다. 이 모든 것의 미래가 불확실해졌다. 독일이 자신의 모델을 유럽연합 전체에 적용하려고 한다는 말과는 달리, 문제가 있는 나라들을 구제할 독일과 유럽연합의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 결정을 6월로 연기한 이번 유럽정상회담이 이를 잘 보여 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현실이 문제가 있는 나라들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다. 그리스를 보면, 정부는 현재 허공에 떠 있는 상태다. 구제금융은 효과가

없고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어 유럽연합이 더 강력하게 개입하지 않는 한 그리스는 파산하고 말 것이다. 유럽 주변국들의 금융 위기가 이제 다음 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투쟁의 측면에서 보면, 그리스는 저항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 잠잠해졌던 저항이 올해 2월 다시 돌아왔다. 2월 투쟁은 전투적이었고 큰 규모로 진행됐다.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 정부가 유럽연합에 약속한 사유화를 제대로 진행할 수가 없게 됐다. 삭감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테네 시청 건물 점거다. 시 정부가 2천~3천 명의 임시계약직 노동자들의 계약을 갱신해 주지 않자 이들이 시청 건물을 점거하고 투쟁에 나섰다. 우리 동지들이 이 투쟁에서 중요한 구실을 했다.

SEK 당원이 지난해 11월 아테네 시의원으로서 선출됐는데, 해고 위기에 있는 노동자들이 시의회 회의에 들어가 자신들의 문제를 논의할 것을 요구한 적이 있다. 이때 SEK 당원인 시의원이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점거밖에 없다'고 말하자 노동자들이 흥분하며 그 자리에서 점거를 결정했다. 현재 11~12일 동안 점거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의 투쟁이 투쟁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다. 투쟁의 측면에서는 우리는 상승세를 타고 있고 정부는 벼랑끝에 있다.

캘리니코스 스페인은 시장의 다음 표적이 되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 이자율 인상 등 연쇄적인 조치

들이 그 예다. 포르투갈은 곧 IMF와 유럽중앙은행의 손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 점점 확실해 보인다.

이에 스페인은 위기가 더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지만 미래는 불확실하다. 파노스가 말한 것처럼 부채 위기가 해결되려면 아직 멀었기 때문이다. 긴축 정책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가속화시키고 있다. 불안정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슈테판이 말한 것처럼 독일이 앞장서서 일괄타결이라는 미친 계획을 내놓고 나머지 유럽연합 특히 프랑스가 뒤따르게 하는 데 성공했지만 곳곳에서 폭탄들이 터지고 있다.

영국에서 우리는 총파업을 호소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 지난 3월 26일 집회에서 우리는 소수파였다. 집회에 참가한 동지들은 총파업을 주장하는 것보다 긴축 반대를 주장하는 것이 더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공공부문에서는 몇몇 좌파적 노조를 특히 강사·교사 노조들이 원칙적으로 공동 행동을 조직하는 데 동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 공공부문의 상당 부분이 하루 파업을 하자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실현된다면 총파업으로 한 발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 그러지만 아직 핵심 노조 특히 지자체 공무원노조 상층 간부들은 하루 파업 조직에 열의를 보이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들이 계속해서 파업 요구를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지자체 정부의 공격이 거세질 것이 때문이다.

파노스가 더 자세히 말하겠지만 그리

스에서는 대안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하나는 부채를 갚는 것보다 디폴트[채무 불이행] 선언이 나은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로화에 대한 것이다. 일부 좌파는 그리스가 위기에서 빠져나오려면 부채를 디폴트하고 유로존에서 탈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 전역에서 이 논쟁은 매우 불균등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로 이 이슈에 관해서는 더 많은 토론을 권하고 있다. 예컨대 1년 전 SEK의 제안으로 우리가 NPA(프랑스 반자본주의 신당)와 함께 유로존 위기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제한적인 조치에 대한 동의 외에 일반적인 합의점을 찾기는 매우 어려웠다. NPA가 경제주의 또는 노동자주의적이기 때문에 정리해고에는 반대하지만 은행의 국유화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다. 포르투갈 '좌파 블록'은 일반적으로 더 소극적이어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은행 국유화를 반대했다. 유로존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불안해했다.

파노스 알렉스가 방금 말한 디폴트 선언과 유로존 탈퇴는 우리가 주장한 것이다. 이 주장은 그리스 좌파 내에 논쟁을 일으켰다. 최근에는 좌파 일부가 우리의 주장을 지지하기 시작했다. 전통적으로 유럽연합에 가장 강경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 공산당은, 처음에는 부채 논의가 주의를 딴 데로 돌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게 주장한다. 지금은 노동자들이 부채를 무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작은 발전이다.

시나스피스모스[Synspismos 그리스 의 좌파진보연합]에서는 한 좌파 경향이 회의를 열고 기존의 친유럽연합 입장을 버리고 우리와 비슷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유럽중앙은행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것과 부채 재협상을 요구했다. 상황이 좋아지고 있지만 논쟁은 앞으로 그리스가 부분적으로 디폴트를 선언하고 채권의 가치를 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될 몇 달 동안 더 심화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논쟁에 집중할 것이다. 그리스의 사례가 유럽 전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디폴트 선언과 유로존 탈퇴

유로존에서 아일랜드·그리스·포르투갈 등에 국가 부채 위기가 오자, 유럽 좌파 내에서는 디폴트(채무불이행)와 유로존 탈퇴가 대안으로 제시되면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디폴트는 지배자들의 무분별한 돈놀이 때문에 생긴 국가 채무를 갚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위기의 책임과 고통을 대중이 아니라 탐욕스러운 은행·투기꾼에게 부담시키자는 것이다.

유로존의 탄생도 유럽 지배자들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으로 추진된 것이고, 현재는 경제 위기 고통선거의 틀이 돼 있다. 따라서 좌파들이 유로존 탈퇴를 요구하는 것은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 지배자들에 함께 맞서 싸우며 유럽 노동자들의 국제적 단결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교사 노동자가 말하는

경쟁에 반대한다

‘세계 10대 대학’이 되기 위한 경쟁력을 키우려 했던 카이스트는 ‘로봇 영재’를 비롯한 어린 인재들을 자살로 몰아갔다. 학생들이 연달아 자살하는데도 카이스트 총장 서남표는 ‘카이스트 운영을 잘했으니 사퇴할 마음이 없다’고 한다. 40년 만에 처음 열린 카이스트 학생비상 총회에서도 서남표 사퇴 요구는 제기되지 않았다.

여전히 일부 학생들은 경쟁 교육의 최전선을 진취했던 서남표 총장을 지지하고 있다. 이젠 아마도 경쟁에 대한 오래된 믿음 때문일 것이다. 과도한 경쟁은 문제이지만 적절한 경쟁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믿음. 경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경쟁을 해야 최선을 다하리라는 경쟁 신화에 대한 믿음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경쟁 속에서 자란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점수에 따라 줄 세우고, 가장 먼저 문제를 푼 학생에게 보상을 주거나 발표를 하면 가산점을 준다.

어린 아이들은 친구와 함께 블록으로 뭔가를 만들며 논다. 서로 블록을 하나씩 갖다 붙이면서 뭔가가 완성이 되면 박수를 치고 좋아한다. 그런데 학교에 들어가고 나면 각자 뭔가를 만들고는 누구 것이 더 멋진가를 묻는다. 더 멋지다는 말을 들은 아이는 참 신나하지만 덜 멋지다는 말을 들은 아이는 시무룩해지고 심하면 상대 아이의 작품을 박살내 버린다.

이처럼 경쟁이 만연한 사회에서 살다보니, 우리는 어떤 목표를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모두 경쟁이라고 부르곤 한다. 이런 식으로 경쟁이라는 말이 오용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나 자신과의 경쟁”이라는 표현이다.

그러나 2차 방정식이나 미적분 문제를 풀 능력을 기르려고 하거나, 핵발전소의 구조와 방사능 피해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경쟁은 아니다. 내가 1등이 되려면 다른 누군가는 1등이 될 수 없는 것이 경쟁이다.

어디서나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에 살다보면 경쟁이 있어야만 재미있다는 생각도 나온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 프로그램 ‘나는 가수다’에서는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들이 다른 사람의 노래를 편곡해서 불렀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 5백 명이 채점을 하고, 최하의 점수를 받은 가수는 탈락한다.

각자 개성이 다른 가수들이 자신의 색깔에 맞는 노래를 부르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며,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 그런데 각자 다른 개성을 가지고 노래부르는 이들을 하나의 잣대로 평가할 수 있는가? 그러므로 이것은 경쟁일 수가 없다. 경쟁일 수 없는 것을 경쟁으로 부추기는 이 사회가 웃긴 것이다.

아름다운 협력

경쟁을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만연한 사회에서 교육학자 알피 쿤이 쓴 《경쟁에 반대한다》라는 책은 해독제 구실을 한다. 알피 쿤은 경쟁이 필연적인가, 더 생산적인가, 더 재미있는가 등의 문제를 차례로 검토하며 경쟁에 반대하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그리고 이 책은 경쟁과 교육적 성취에 관한 교육학자들의 연구 결과들이 거의 예외없이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른다고 지적한다. “수준이 낮거나 중간 정도인 학생이 각각 다른 능력을 가진 학생들과 협동하여 학습하면 더 잘 배우게 되는 것엔 의심의 여지가 없다. …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이 손해를 보는 일은 없었다.”

다시 말해,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학습 방법이 별 영향을 주지 않지만, 중·하위권 학생들에게는 경쟁학습보다 협동학습이 분명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나는 올해 3월부터 협동학습을 시작했다. 모둠을 만들고 모둠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학습에 전혀 뜻이 없는 아이들과 월등한 능력을 갖춘 아이들은 협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학습에 뜻이 없는 아이들은 이미 경쟁학습에서 여러 번 실패를 맛보았기에 자신은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고 의욕을 보이지 않았다.

학습 능력이 뛰어난 아이는 혼자서 문제 해결을 다하고 다른 책을 읽고 있다. 같이 협력하고, 의견을 나눌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한 달간의 협동 학습을 끝내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협동학습이 공부에 더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친구의 생각을 알게 돼서 좋고, 함께 문제 해결을 하니까 서로 더 친해지는 기분이란다. 아직 서툴지만 아이들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

경쟁은 성적이 좋은 아이에게는 실패하면 어찌나 하는 불안감과 두려움을 안겨 주고, 성적이 낮은 아이는 아예 포기하게 만든다.

경쟁 신화에 길들여진 우리는 경쟁 신화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구이며 그들이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한다.

동물은 이산화탄소를 내놓고 산소를 필요로 한다. 식물은 산소를 내놓고 이산화탄소를 필요로 한다. 이 아름답고 신비로운 협력 관계가 바로 우리가 가르치고 배워야 할 것이다.

박혜성 교사



‘명문’ 고등학교·대학교 합격자를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등하교길 대학의 무한경쟁은 중고등학생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경쟁 논리를 퍼트린다.

신자유주의와 대학의 무한경쟁

학생들의 연세 자살 사태를 낳은 카이스트의 냉혹한 경쟁 시스템은 한국 대학 교육 전반의 문제이기도 하다.

서남표의 총장 취임 이래 카이스트 세계 대학 순위가 급상승하자 그의 ‘개혁’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고등교육 기관의 미래를 보여 주는 성공 모델로 지배자들의 찬사를 한몸에 받았다. 단지 보수파만이 아니라 자유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서남표를 MB 경쟁교육의 상징으로 묘사하지만, 사실 막대한 연봉을 약속하며 미국에서 그를 모셔 온 것은 노무현 정부다.

서울대도 “세계 수준의 대학 건설”에 뛰어 들었다. 해외 언론과 평가기관 들이 매년 대학 순위가 상승하는 동안 등록금 인상, 교수들에 대한 연구업적 평가 등 통제가 강화되는 일이 함께 일어났다. 마침내 ‘국가경쟁력 강화’를 내세우며 서울대 법인화 법이 통과됐다. 고려대와 연세대 같은 명문 사립대는 물론, 삼성과 두산 같은 대기업이 대학을 인수한 성균관대와 중앙대도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외치며 대학을 구조 조정해 왔다. 돈벌이가 잘 되지 않는 인문사회 분야 학문이 기피되고, 대학은 학생 교육보다 연구에 더 중점을 두게 됐다.

글로벌 경쟁의 일환으로 영어 강의도 확대됐다. 카이스트처럼 1백 퍼센트 전면 도입은 드물었지만 명문대를 중심으로 영어 강의가 부쩍 늘었다. 일부 대학들은 영어 강의 수준을 넘어 아예 영어 공용화를 추진한다. 포스텍(포항공대)은 지난해 2월 영어 강의는 물론, 논문과 교수회의, 세미나, 행정 문서에서 학내 게시물에 이르기까지 캠퍼스 내에서 전면 영어를 쓰겠다고 선언했다. 2009년 개교한 울산과학기술대나 광주

과학기술(GIST)도 영어 공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압도다수의 사람들이 영어를 일상어로 쓰지 않는 한국에서 고등교육기관들이 영어 전공이 아닌 과목에 영어 강의를 도입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다. 이것이 그저 ‘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영어 소통 능력을 발전시키려는 것이라는 주장은 기만적이다.

엘리트 대학들이 주도하는 영어 강의나 공용화 정책들은 대학의 명성을 높이거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함으로써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려는 노력의 일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학의 국적 논란이 아니라 이런 정책이 은폐된 계급 차별이라는 것이다.

계급 차별

영어 강의를 충실히 이해해 높은 학점을 받고, 능숙하게 영어 논문을 쓰고, 영어권 외국인들의 감탄을 자아낼 만큼 유창한 영어로 강의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미국인 뽀치게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모두 부자인 것은 아니지만, 조기유학이나 국내 외국인 학교 입학, 영어 가정교사 채용 따위로 자녀의 영어 학습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부유층에게 극도로 유리한 것은 자명하다.

자본가들과 시장주의 관료들은 고등교육의 다양한 목적을 오로지 경제적 목적으로 환원하고 있는데, 이런 논리는 교육의 목적을 편협하게 만들면서 자본주의 체제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사회생활 곳곳에 깊숙이 침투시키고 있다.

그러나 경쟁과 지식의 상업화가 탁월한 학문적 성과를 낸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획기적으로 바꿔 놓은 중요한 연구들이 모두 그런 방식을 통해 이뤄진 것

은 전혀 아니다. 다윈도, 아인슈타인도 상업적 동기에서 연구를 한 게 아니며, 그 결과물도 상업화하지 않았다. 또, 그들은 1년에 해외 유명 등재 학술지에 쓴 논문 수로 연구업적을 평가받으며 그런 위대한 성취를 이룩하지도 않았다.

자본주의 발전은 지적 성취 면에서도 여러 제약을 만들어내고 있다. 지적재산권이 단적인 예다. 새로운 지식 창출은 단지 개인의 천재적 능력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과거 인류의 물질적, 정신적 성취가 누적된 바탕 위에서 일어난다. 따라서 자본가들이 인류가 성취한 결과를 개인의 이익으로 전유하는 것은 사회에 대한 갈취 행위다. 미국의 명문대학들은 특허권 다름에 깊이 연루돼 타락했는데, 한국의 대학들도 이런 길을 따라가고 있다.

고등교육 시장화는 고등교육 기관에 오래전부터 존재한 불평등과 소외를 심화시키고, 학문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더 후퇴시키고 있다. 이런 흐름은 결코 불가피하지 않다. 인간답고 평등하고, 진정으로 지적이고 창의적인 사회를 위해 학생과 지식인, 노동계급이 단결해 맞서야 한다.

지식은 돈벌이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세계를 과학적으로 이해해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기르도록 돕는 데 이용돼야 한다. 개인의 다양한 잠재력을 계발하는 것과 사회의 발전이 모순되지 않는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그러려면 경쟁이 아니라 협력, 이윤이 아니라 대중의 필요에 바탕을 두고 생산이 계획되는, 진정으로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죽을 때까지 사회주의자로 산 까닭이다.

정진희

카이스트 학생이 말한다

“서남표 총장은 기업 CEO 같아요”

카이스트는 기업화가 정말 심각합니다.

기업은 연구비를 줄이려고 대학을 끼고 연구를 합니다. 연구 성과들을 가지고 기업은 마케팅에 적용한다든가 하죠.

기업은 돈을 투자하면서 논문에 관여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업에 좋은 쪽으로 결과를 내요. 결과적으로 언론까지도 장악하게 되는 셈이죠. 학문 자체를 더럽히는 것이구요. 저로서는 기업의 참여라는 것이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저도 연구하고 배우는 것을 기대하며 카이스트에 왔는데 연구가 거의 기업 프로젝트 판이라 많이 실망했어요. 프로젝트와는 전혀 관계가 없

는 경쟁 기업을 조사하거나 마케팅을 연구하는 등 … 그게 무슨 교육에 효과가 있다고 …. 진로가 참 고민스럽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서남표 총장은 기업 CEO의 관점을 대변하고 학생들은 노동자와 비슷한 입장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무보수로 일해 주고 있잖아요.

카이스트는 대학 자체가 기업 문화를 너무나 베껴 오고 있어서 힘들어요. 실적이랑 결과를 너무 중요시하는 분위기이고, 교육 자체도 경쟁 위주의 뼈두한 수업이니깐요.

학생들도 학점이 안 나오면 0.01학점당 6만원 씩 내야 해요.

다른 것을 하고 싶은데 왜 영어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학생들이 많아요. 단지 경쟁을 위해서 해야 하고 그것 때문에 하고 싶은 다른 것을 못 하게 돼서 불만이 많죠.

학문이라는 것 자체가 본인이 즐겁고 정말 희열을 느껴야 하는데, 너무 치열하게 경쟁하니까 목표 의식이나 삶의 질을 오히려 깎아내리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경쟁 속에서만 살아온 사람들이 진정으로 [제대로 된] 본인들이 추구하는 연구를 해 낼 수 있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백승현 카이스트 서울캠퍼스 테크노경영 1학년
인터뷰·정리 정선영

Letter@left21.com

독자토론광장

5월 2일(월)까지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 지인과 나눈 대화,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 등 어떤 것이든 보내 주세요. 책임 있는 토론을 위해 국가보안법 등 국가 탄압이나 사용자 탄압, 소수자 차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되도록 실명으로 기고해 주길 바랍니다. 지면이 넘쳐 실지 못한 독자편지는 본지 웹사이트에 실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공금을 유용한 총장을 망신주다

지난 4월 1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진행한 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외대) 감사에서 홍보비 1억 원가량이 유용됐다는 사실이 기사화됐다. 교과부는 총장 박철과 보직교수 3인에 대한 경징계를 재단이사회에 요청했다. 마침 외대에서 박철 총장 특강이 예정돼 있었다.

다함께 외대모임은 중앙운영위원회(총학생회장단과 단과대 학생회장 등으로 구성된 학생들의 의결기구)에서 특강 자리에 가서 팻말 시위 등의 방법으로 항의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시위 자체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몇몇 중앙운영위원들과, 총장 특강과 이 문제는 상관없다는 총학생회장의 반대 때문에 학교의 해명을 요구하는 수준으로 논의가 정리됐다.

하지만 우리는 총장 특강을 이대로 넘길 수 없다고 판단해 진보적 학생회들에 시위를 제안했고, 곧 우리의 제안이 받아들여졌다.

급박하게 조직했음에도 스무 명이 넘

는 학생들이 현장에 모였고, ‘공금유용 규탄한다!’, ‘등롱금을 인하하라!’, ‘감사 결과 공개하라!’ 등의 요구를 쓴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총장이 강연장에 들어가자, 시위하던 학생들은 팻말을 들고 침묵시위를 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총장은 학생들을 내쫓기 전엔 강연을 시작할 수 없다고 처장단에게 공개적으로 명령했고, 보직교수들이 우리를 내쫓기 시작했다. 다함께 회원들이 강력히 항의를 했지만 학교의 협박은 계속됐다. 우리는 강연이 지연돼 피해를 받을 학생들을 생각해 팻말을 내리고 공격적 집의를 하기로 다시 결정했다.

특강은 박철 총장 자신의 업적 과시로 시작됐고, 우리 시위를 인식했는지 감사 결과에 대한 핑계가 주를 이뤘다. ‘한해 예산이 2천억 원인데 1억 원은 작은 돈이다’, ‘연간 2백 건의 교수 해외연수 중에 네 건 적발된 것이 대수냐’, ‘노래방, 골프장 등에서 쓴 돈이다’라는 발언을 하며 우리를 더욱 분노케 했다.

질의응답 시간에 나를 비롯한 외대 회원들이 총장 비리를 비판하는 주장을 했지만, 똑같은 이야기만 늘어났다.

시위와 특강에 참가한 많은 학생들이 학교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분노를 감추지 못했고, 대화가 아니라 투쟁으로 학교를 압박해야 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깨달았다. 이번 시위는 비리 문제가 공론화되기를 꺼려하며 슬쩍 넘어가려는 학교 측에 일침을 가한 좋은 기회였다.

또한 이번 시위를 통해 외대 내 진보적 학생회를 포함한 진보적 구성원들과 공동행동의 초석을 다질 수 있었다.

5월 중순에 외대 비상학생총회가 예정돼 있다. 이때 다함께 외대모임은 학벌주의적인 복수전공 반대 안전(〈레프트21〉 52호 이재권의 독자편지 참고)이 아니라 노천극장 철거사태와 총장의 비리 문제를 제1안전으로 상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힘쓸 것이다.

이재성 다함께 한국외국어대 모임

집시법 토론회 참가기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공감대와 쟁점들

이명박 정부가 집시법의 신고제를 사실상 허가제로 이용하면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얼마 전 이를 비판하는 학술발표회 “집시법의 신고제의 위헌성과 미신고집회 처벌의 문제점”이 열렸다.

나도 〈레프트21〉 거리 판매를 하다가 미신고 집회 혐의로 부당하게 재판을 받고 있어 이 자리에 관심을 가지고 참가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최은아 활동가는 신고대상이 아닌 1인 시위, 문화제, 기자회견 등을 경찰이 자체 ‘매뉴얼’에 따라 규제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를 통해 “집회에 대한 사전 검열”을 노린다는 것이다.

신고제의 위헌성을 제기하는 주장들도 나왔다. 배제대 김중서 교수는 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검열 효과를 낸다고 말했다. 서강대 이호중 교수도 “사실상 경찰이 집회의 주장 내용을 근거로 집회 금지 통고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현행 신고제는] 허가제를 금하는 헌법의 이념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말했다.

반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이기도 한 고려대 박경신 교수는 “[신고제가]

내용 규제 목적으로 남용될 경우 위헌”이지만, 아직 그런 사례가 일반적이지 않으므로 “통계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나아가 그는 다른 발제자들과 달리 신고제가 위헌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신고제는 이미 “내용 규제 목적”으로 남용되고 있다. 나는 청중 발언 시간에 〈레프트21〉 탄압 사례를 말했다. 최은아 활동가도 “용산 참사 항의 운동으로 받은 [집시법 위반] 벌금이 8천만 원에 이른다. 사후 처벌이 이 정도라는 것은 사실 어떤 얘기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헌

그런데 아쉽게도 대다수 발제자들은 이명박 정부의 막 나가는 규제와 처벌은 반대하면서도, “공공질서에 대한 위협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경우”(김중서 교수)에는 사후 규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위협”은 대체로 시위대의 폭력을 뜻했다.

그러나 집회 현장에서 조직적으로 무장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쪽은 주로 경찰이다. 시위대는 대체로 비무장이거나, 경

찰 폭력에 맞서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물리력을 사용하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시위대의 폭력을 문제 삼아 규제를 정당화하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것이다.

한편 박경신 교수는 좀 더 폭 넓은 규제 조처를 주장했다. 집회장 쓰레기에 물리는 벌금 같은 규제는 “비내용적 규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쓰레기든 폭력이든 그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집회 규제는 얼마든지 집회의 자유를 제약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과거 노무현 정부가 한미FTA 반대 운동을 공격하려고 집회장 쓰레기에 벌금을 물렸던 사실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김중서 교수는 집시법과 신고제 폐지를 주장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국가가 방해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몇몇 참가자들은 이 주장이 다소 비현실적이라고 취급하는 듯했다.

그러나 투쟁을 조직한다면 집시법 폐지는 가능하다. 강원대 문병호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1918년 독일 혁명으로 집회 허가제가 폐지되고 아무런 제한이 없어졌다.” 혁명으로 노동자 민중이 완전한 민주주의를 쟁취한 것이다.

김지태

충북 제천 4·27재보궐선거

진보 후보의 독자 출마를 지지한다

충북 제천에서는 두 곳에서 4·27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두 곳 모두 민주당 당선자들의 뇌물 수수, 허위 학력 기재 때문에 당선이 취소된 곳이다.

민주노동당은 충북도의회에 환경미화원 노동자 정이택 후보를 출마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런 결정은 민주노동당 제천단 양지구협의회 등 제천 지역 진보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정이택 후보 지지 기자회견에는 환경운동연합도 참가해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했다.

단일화 압력

제천 지역도 한나라당 후보를 낙선시키려면 야권이 연대해 후보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압력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민주노동당이 독자후보를 내고, 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단체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민주당 도의원 후보에 대한 분노와 반감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 박상은 후보는 4·27 재보선을 코앞에 두고 자신이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던 민주노동당을 탈당하고 민주당에 입당해 도의원 후보 공천을 받았다. 박상은은 ‘한나라당을 심판하기 위해서’라고 자신의 배신을 정당화했지만, 진보적인 사람들은 이명박 정권에 대한 대중

적 반감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저열한 기회주의에 역겨움을 느끼고 있다. 더군다나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 시장 위원장과 지지분한 뒤통매가 있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후보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나라당 심판이 어렵다며 연일 압력을 넣고 있다. 민주노동당 선대본은 올바르게도 “후보단일화는 없으며, 유일한 후보단일화는 민주당 후보의 사퇴뿐”이라고 답했다.

그럼에도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한나라당 후보단일화의 압력이 커질 수 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독자후보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

실사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하더라도 민주노동당 탓이 아니다. 그것은 무상의료를 말하면서도 제주도에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고, 철새·부패 정치를 자행하면서도 ‘한나라당 심판’을 외치는 기만적인 민주당 탓이다.

진보 후보가 출마해 의미있는 득표를 한다면 보수정치만 판치는 지역 정치에 진정한 압력이 될 수 있고, 수많은 노동자·서민에게 진보적 정치대안의 전망을 보여 줄 수 있다.

안우춘

건국대학교

진보적 담론의 장, 생활도서관을 지켜내자

4월 13일 건국대학교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 황당한 결정이 내려졌다. 생활도서관을 총학생회 산하 공식 학생기구에서 삭제하는 문제를 다음 임시 전학대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생활도서관을 폐지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생활도서관 폐지를 주장하는 학생대표들은 생활도서관의 “진보 편향성”과 생활도서관이 주최하는 강연회에 참가하는 학생이 적다는 것을 그 논거로 든다.

물론 생활도서관이 “좌편향적인 것”, 다시 말해 진보적인 담론을 다룬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점이 왜 비난받아야 할 점이란 말인가?

대학이 자본의 시녀로서 존재하며 취업학원으로 전락해 주류 담론만을 생산하고 대학생 하나하나를 상품화하는 시대에 대안을 찾고 체제에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의식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것이 어려운 상황, 바로 그 상황이 생활도서관을 있게 했던 시대상이다.

일부 대의원들은 진보적 학문에 대한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소수라고 여기고,

이런 소수 학생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학생회비가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의 생각은 극히 표피적이다. 장하준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와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같은 책들이 대학가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것은 오늘날 많은 학생들이 보수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인 주류 담론이 아닌 다른 대안을 갈구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증거다. 이러한 경향이 건국대학교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생활도서관의 활동은 학생대표들로부터 비난받아야 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고무돼야 할 일이다.

현재 생활도서관 수습위원들은 생활도서관을 지켜내는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생활도서관을 지키는 것은 학내의 진보적 담론 형성의 장을 지켜내는 일이다. 생활도서관이 대학이라는 사막 속에서 진보적 사상에 목마른 학생들의 오아시스로서 계속 존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김소망

위기의 자본주의, 그 대안을 찾는 토론 공간

다함께 공개포럼에 초대합니다!

주최 다함께
www.alltogether.or.kr

* 웹사이트에 포럼 일정을
수시로 업데이트합니다.
* 참가비는 장소 대여 등에 사용됩니다.

다함께 서울 동부 공개 포럼
강경대 열사 사망 20년 —
1991년 5월, 학생과 노동자들은
어떻게 독재 정권에 항거했는가?

연사: 한규한 (다함께 활동가)
일시: 4월 27 (수) 오후 7시 30분
장소: 자양4동 주민센터 4층 7호선 독성유원지역 4번 출구
참가비: 3천 원(학생 2천원)
문의: 02-447-0397, 010-9910-2021

다함께 서울 남부 공개 포럼
임금 인상 투쟁의 정치경제학 —
왜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지지해야 하는가?

연사: 최영준 (다함께 운영위원)
일시: 5월 3일 (화) 오후 7시 30분
장소: 모임전문공간 모토S실 (강남역 8번 출구 20미터 강남제일빌딩 8층)
참가비: 4천 원
문의: 02-416-0363, 010-2401-1987

다함께 서울 중북부 공개 포럼
파리 코뮌 140주년 —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권력을 잡았을 때

연사: 이현주 (〈마르크스21〉 편집위원)
일시: 5월 4일 (수) 오후 7시 30분
장소: 웹사이트 추후 공지
참가비: 2천 원
문의: 070-8113-8541, 010-8033-7822

다함께 서울 서부 공개 포럼
임금 인상 투쟁의 정치경제학 —
왜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지지해야 하는가?

연사: 박성환 (다함께 운영위원이자 노동조합팀장)
일시: 5월 12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가톨릭 청년회관 CYC 4층 (홍대입구역 2번 출구)
참가비: 3천 원 (학생 2천 원)
문의: 02-324-3400

대학생다함께 마르크스주의 포럼

서울지역 대학 마르크스주의 포럼
강경대 열사 사망 20년 — 1991년 5월,
학생과 노동자들은 어떻게 독재 정권에 항거했는가?

연사: 강민조 (故 강경대 열사의 아버지)
김인식 (1991년 5월 투쟁 참가자; 당시 학생, 〈레프트21〉 발행인)
일시: 4월 28일(목) 오후 7시
장소: 이화여자대학교 포스코관 253호
참가비: 2천 원 문의: 010-5678-8630

충청지역 대학 마르크스주의 포럼
핵 없는 세상은 가능한가? —
마르크스주의적 분석과 대안

연사: 장호중 (〈레프트21〉 기자, 기후정의 활동가)
일시: 5월 20일 (금) 오후 5시 30분
장소: 충남대학교 (강의실 추후 공지)
문의: 010-2297-4258

다함께 경기 남부 공개 포럼
핵 없는 세상은 가능한가? —
마르크스주의적 분석과 대안

연사: 장호중 (〈레프트21〉 기자, 기후정의 활동가)
일시: 5월 12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골든프리자 5층 대회의실 (수원역 앞 애산동 주민센터 옆)
참가비: 1천 원
문의: 010-6663-0032

다함께 서울지역 연락처

서울 동부지구
연락처: 02-447-0397 atge@paran.com
http://blog.naver.com/atgeforum
서울 광진구 중곡4동 93-49 2층

서울 서부지구
연락처: 02-324-3400 atgwestmail@gmail.com
http://blog.naver.com/atgwestforum
서울 마포구 동교동 174-14번지 3층

서울 남부지구
연락처: 02-416-0963 atgsouthmail@jinbo.net
http://blog.naver.com/nambu_forum
서울 송파구 삼전동 7-1 402호

서울 중북부지구
연락처: 070-8113-8541 jballtogether@gmail.com
http://blog.naver.com/atgibforum
서울 종로구 송인2동 201번지 13호

Report@left21.com

소식·보고 면은 작업장과 대학 등의 투쟁 소식을 나누는 장입니다. 5월 2일(월)까지 소식을 보내 주십시오.

보건의료노조

직권조인에 대해 공개 사과한 지도부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이 최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영남대의료원지부의 투쟁에 직권조인한 것에 관해 공개 사과했다. 영남대의료원지부는 현명하게도 공개 사과뿐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몇가지 조치를 요구했는데, 지도부가 이것도 수용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3월 30일 대의원대회에서 “마지막 타결 과정에서 영남대의료원지부 간부들의 의견을 존중해주시 못[하고] ...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 ... 사과한다”고 했다. 위원장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은 잘한 일이다. 직권조인은 노동조합 민주주의를 훼손하므로 마땅히 더는 벌어져선 안 되는 행동이다. 나도 이런 점을 비판하는 글을 보건의료노조 웹사이트 게시판에 올렸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다.

그런 점에서 위원장이 직권조인 자체에 관해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고 한 것은 아쉽다. 옳고 그름의 판단은 ‘조합원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했는가 그렇지 못했는가, ‘투쟁의 의지를 고무했는가 찬물을 끼얹었는가’ 하는데 있으니 말이다.

이번에 영남대의료원지부가 재발 방지 대책으로 제안한 요구는 중요한 것들이었다.

일상적 토론을 통한 건강한 노조 만들기, 협상안에 대한 충분한 토의, 지도부의 상시적 현장 순회, ‘집중 투쟁’다운 투쟁 전개, 파업을 힘차게 준비하고 실천했던 정신 살리기, 무상의료·보호자 없는 병동 등을 내건 사회개혁 투쟁 참가 등.

노조는 영남대의료원지부와와의 약속대로 앞으로 “현장성·민주성·투쟁성·연대성·전투성”을 강화해야 한다.

세계경제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물가·전세값 폭등, 등록금 인상 등으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대폭 삭감됐다. 병원 현장 역시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 요구가 매우 높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대의원대회를 계기로 조합원들의 요구를 받아 현장의 자신감을 높이며 이번 임단투(임금·단체협약 투쟁)를 제대로 건설해야 한다.

박미혜 보건의료노조 대의원, 고대의료원지부 조합원

현대차

타임오프 무력화와 임금 인상을 위해



현대차 제 현장조직 활동가들이 4월 19일 대의원대회에서 타임오프 제도를 일부 수용한 이경훈 집행부를 비판하며 쟁의 결의를 촉구하고 있다.

현대차 사측이 본격적으로 타임오프 공격을 시작했다. 그런데 이경훈 집행부는 4월 14일 부분적인 노조 활동만 보장하는 내용의 특별협약에 합의해 노동자들의 반발을 샀다.

현대차 울산공장 내 7개 현장조직들은 이경훈 집행부가 “자주적인 조합 활동을 사측이 통제 가능하도록 합의했다”며 정면 비판했다. 그리고 최근 대의원대회에서 파업 결의를 요구해, 대의원 59퍼센트의 지지를 받아 이를 관철했다.

그런데 대의원대회에서 파업 시기를 정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 이 때문에 이경훈 집행부가 시간을 끌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지금 필요한 것은 투쟁으로 타임오프를 완전히 무력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임금과 조합비 인상을 통해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는 기아차 노조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다.

일부 현장조직들은 “피랍 어린 조

합원 임금으로 [전임자 임금] 대체하면 안 된다”며 기아차 사례를 비판하지만, 이것은 반대할 게 아니라 권장해야 할 일이다. 노조 간부들이 조합비를 받아 활동하면 조합원들의 요구와 이익을 더 잘 대변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임단투에선 임금 인상 요구도 매우 중요하다.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으로 주야 맞교대와 잔업·특근에 시달리는 동안, 현대차의 ‘정 부자’(회장 정몽구·부회장 정의선)는 수백억 원씩 챙기며 주머니를 불렀다. 그래서 현장에선 “올해는 반드시 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이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더 절실하다. 이 때문에 금속노조는 비정규직도 정규직과 동일한 액수로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를 결정한 바 있다.

그런데 이경훈 집행부는 대의원

대회에서 금속노조의 비정규직 임금 인상 요구안을 거부했다. 비정규직의 열망을 외면하고 정규직 자녀 ‘특혜’안까지 내걸었으니 오죽했겠나.

》관련기사 4면

지금 이경훈 집행부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노동자들의 열망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투쟁을 회피하고 있다. 집행부는 최근 진행 중인 노사협약에서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주간연속2교대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타협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좌파 현장조직·활동가 들의 구실이 중요하다. 지금 주요 좌파 현장조직들은 상대적 우파 현장조직까지도 함께 공동행보를 벌여야 한다는 생각에 얽매이는 듯한데, 이렇지 말고 조합원들 사이에서 독립적으로 좌파적 선동을 벌이며 투쟁의 구실을 만들어야 한다.

정동식 현대차 울산4공장 현장위원

기아차

야간 노동 철폐해 비정규직 정규직화하자

물가 폭등으로 노동자·서민의 비명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지만, 30대 기업의 기업주들은 최대 이윤을 챙기며 배를 불리고 있다. 특히 현대·기아차의 회장 정몽구(7조 3천3백29억 원)와 부회장 정의선(2조3천1백6억 원)은 천문학적 부를 축적하며 세습하고 있다.

그런 데도 현대·기아차 사측은 2005년에 노·사 합의한 ‘심야 노동 철폐’를 통한 주간연속2교대 근무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그것이 회사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핑계를 대면서 말이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여전히 세계 최장이다.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조기에 소진시킬 뿐 아니라, 가정 불화와 정년 퇴직 후 사회적 관계에서 소외를 가져온다.

심야 노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끔찍한 수준이다. 독일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심야노동은 위장 장애와 암 등 각종 질병 유발은 물론이고 약 13년 이상 인간의 수명을 단축시킨다. 이 때문에 이미 유럽·미국·일본 등 대부분의



기아차 생산라인 속의 <모던 타임즈> 기계 부품들이 돼 장시간 심야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수명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

자동차 회사들은 주간2교대제 근무를 시행해 심야 노동을 하지 않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야간 근무시간에는 좀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주·야 근무에는 전혀 차이가 없다. 야간이라고 볼트를 적게 조일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닌가.

하루에 자동차 4백 대를 조립하게 되면 10초~1분 마다 반복 작업을 해야 한

다. 이렇게 작업을 하다 새벽 시간이 되면, 어느새 내가 일하는 사람인지 콘베이어 벨트의 부품품인지 구분할 수가 없다.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를 연상하면 꼭 맞다.

주간연속2교대제는 이런 현실을 개선해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길이다.

더구나 이 제도의 시행은 다음의 두 가지가 뒷받침된다면 또 다른 중요성도 가

질 수 있다.

첫째, 노동시간을 실질적으로 단축해야 한다. 현재 열 시간 이상 되는 노동시간을 하루 여덟 시간 이하로 낮춰야 한다. 이렇게 되면,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양질의 일자리를 대규모로 창출할 수 있다.

둘째,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로 임금 형태를 변경해야 한다. 이것은 적은 기본급 때문에 잔업·특근을 해야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이다.

따라서 주간연속2교대제와 월급제 도입은 노동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다.

올해 임금·단체협약 투쟁에서 현대·기아차 노조는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을 내걸고 싸워야 한다. 이것은 건강권 확보는 물론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불법파견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전투적 활동가들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와 주간연속2교대제 투쟁을 결합하는 데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김우용 기아차지부 소속 금속노조 중앙위원

전교조



2003년 'NEIS 폐기'를 촉구하는 전교교사대회

정보 인권 침해하는 차세대 NEIS 시행 중단하라

올해부터 학교 컴퓨터가 분주하다. 정부가 9백여억 원을 들여 ‘차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제작업체는 삼성SDS 컨소시엄)’을 개통했기 때문이다.

NEIS는 2003년 추진 당시부터 전교조 교사들이 국민적 지지 속에 연가파업까지 벌이며 강력히 반대했던, 심각한 인권침해를 낳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중앙집중적으로 학생들의 개인 정보를 집적·통제하려 했지만 전교조의 항의에 직면해 결국 학교 단위로 분리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에 ‘차세대’라는 이름을 달아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교육청 단위로 통합·집적함으로써 투쟁의 성과를 후퇴시키려 한다.

정부에 따르면, 차세대 NEIS를 통해 전국의 1만여 초·중·고·특수 학교, 1백78개 교육지원청, 16개 시·도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의 모든 교육행정 정보가 연계 처리된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전자민원)·대법원·병무청·대학교·연급공단 등 유관기관의 행정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한다.

‘학생의 신상 정보를 개인의 동의 하에서만 학교 밖으로 보낼 수 있다’는 최소한의 정보 인권 원칙조차 무시한 것이다.

개인의 병력·재산 정보가 집적돼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 정보들이 ‘신상 털기’로 종종 유출됐던 것을 생각해 보면, 정보 유출의 위험이 얼마나 심각할지 예측할 수 있다.

한편, 차세대 NEIS는 정부 스스로 자랑하는 ‘효율’ 면에서도 낙제점이다. 지역적·급별 차이를 무시한 채 모든 학교를 하나의 시스템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단위 학교에서 느끼는 불편은 매우 크다.

특히 정부는 오류를 제대로 점검하지도 않은 채 조급하게 시스템을 가동해 연초 학교의 교무·행정 업무를 거의 마비시켰다. 그래서 학교에선 ‘이 차세대 같은 놈!’라는 말이 가장 심한 욕으로 통용되기도 한다.

안타깝게도 차세대 NEIS는 발령받은 지 2주도 되지 않은 신규 교사를 죽음으로써까지 몰고 갔다. NEIS의 오류를 마치 자신의 부족함으로 여기며 스트레스에 시달렸을 것을 생각하면 저절로 NEIS에 대한 분노가 치민다. 업무가 집중되는 연초·연말 때마다 종종 먹통이 되는 기존 NEIS를 경험해 왔던 경력 교사들조차 ‘차세대 NEIS’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신규 교사는 오죽했겠는가.

정부는 차세대 NEIS 시행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김성보 전교조 조합원 용곡중 교사

Report@left21.com

소식·보고 면은 작업장과 대학 등의 투쟁 소식을 나누는 장입니다. 5월 2일(월)까지 소식을 보내 주십시오.

인하대

“등록금을 내릴 때까지 점거할 것입니다”

인하대학교 학생들이 등록금 3.9퍼센트 인상에 맞서 3월 30일부터 학교 본관 2층을 점거하고 투쟁하고 있다. 전성원 인하대 총학생회장에게 투쟁 각오를 들었다.

총학생회와 단과대 학생회가 나눠서 본관 2층 전체를 점거하고 있습니다. 총장실, 부총장실, 교무처장실, 사무처장실 이렇게 점거하고 있죠.

지금은 시험기간인데 대회의실을 학우들의 열람실로 사용하고 있어요. 교무처장실에서는 노래패 등 동아리 모임도 합니다. 방 앞에 일정표를 붙여 두고 사용하고 싶은 시간을 기록하게 해서 원하는 학우들이 자유롭게 공간을 사용하고 있어요.

학생들은 등록금을 내려도 시원찮을 판에 웬 인상이나 하는 분노가 큼니다.

대학생들이 최저임금 받으면서 여덟 시간씩 다섯 달을 꼬박 일해야 만들 수 있는 돈이 등록금이거든요.

그런데도 인하대는 적립금 1천3백42억 원을 쌓았어요.

게다가 송도 제2캠퍼스 건립을 앞두고 있는데, 관련 비용이 6천억 원이 든 데요.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 끈질기게 등록금 인상을 고수하며 버티고 있어요.



3월 30일 3천여 명이 모인 학생총회

사진 제공 이형우

그래서 학우들이 가장 많이 모인 곳에서 투쟁을 힘있게 해야 한다는 토론이 되면서 학생 총회가 끝나고 바로 점거에 들어갔죠.

어떻게 학생들이 총장실까지 들어오게 했냐, 학교가 잘못했다 하는 말들도 나오구요. 학교에는 부담이 되는 거죠.

점거가 길어지다 보니 학교에 또 다른 압박이 될 겁니다.

학생총회 결정 사항으로 대동제도 투쟁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축제 마지막 날인 5월 20일에 인하인 1만인 대회, 2차 학생총회 이런 형식으로 투쟁

을 할 겁니다.

또 5월 3일에는 자전거 대회와 마라톤 대회를 해 인천 시내를 한바퀴 쭉 돌고 올 계획이에요. 이런 행동으로 지역 사회 전반에 걸쳐 연대가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학교가 말을 듣지 않으면 학우들과 소통하면서 더 추가적인 행동도 할 것입니다.

더는 학우들이 무시당하지 않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학우들과 함께 열심히 싸워갈 겁니다.

인터뷰·정리 정선영

이화여대

“더 싸운다면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올해 이화여대는 신입생 등록금을 2.5퍼센트 인상했다. 약대는 9퍼센트나 올랐다. 지난해 이화여대 평균 등록금은 8백81만 9천 원이었고, 예술 계열은 이미 천만 원이 훌쩍 넘는다. 이렇게 오르는 등록금은 노동계급의 가정에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돈이다.

학교는 앓는 소리를 하지만, 뒤로는 7천3백억 원이 넘는 돈을 쌓아 두고 있다.

이런 높은 등록금을 내고도 학생들은 교수님이 부족해 자기 전공 수업조차 듣지 못할 때도 종종 있다. 자치 활동을 할 공간도 턱없이 부족하고, 냉난방 시설조차 제대로 없는 건물이 많다.

이런 불만이 쌓여 올해 이화여대 학생들은 5년 만에 학생 총회를 성사시키고, 등록금 인상 철회, 장학금 확충, 자치 공간 확충 등을 결의했다.

채플 거부

일주일간 사상 초유의 채플 거부 운동도 벌였다.

첫날에는 4백여 명이 채플이 열리는 대강당 앞에 모여 집회를 열었고, 집회 마지막 날에도 3분의 2 이상이 채플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자 학교 당국은 몇 가지 양보안을 내놓았다. 등록금 인상분의 절반인 4억 원을 장학금으로 돌리고, 그밖에도 냉난방 시설 개선, 학생회실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는 교육 투쟁의 분명한 성과다.

그러나 총장은 “등록금 인상분 반환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학생들은 학교의 양보안을 수용할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투쟁을 지속·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무엇보다 학생들은 올해 신입생 등록금 인상이 내년 전체 학생 등록금 인상의 싹탄이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

그러나 채플 거부 운동 이후 열흘 동안 아무런 투쟁도 조직하지 않던 총학생회는 지금의 양보안이 “학교가 줄 수 있는 최대의 답변”이라고 말한다. “이 투쟁이 흐지부지될 경우, 현재 학교에게 받은 답변에 훨씬 못 미치는 답을 받고 끝내게 될 수도 있다”면서 사실상 양보안을 수용하고 싶어



사진 제공 이형우

4월 3일 채플 거부 선포식

한다.

총학생회는 더 큰 투쟁을 조직할 만한 동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러나 총회에 참가한 2천여 명의 결의와 불만이 갑자기 사라지진 않는다. 전 사회적으로도 등록금 문제에 관심이 높다.

오히려 총학생회가 투쟁을 조직해야 할 시기에 시간을 끌어 투쟁에 김을 뻗는 것이 문제다.

총학생회는 한국대학생연합이 제안하고 있는 4~6월 대정부 투쟁을 강조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 맞선 투쟁은 중요하다. 그러나 학내 투쟁을 회피해서는 진정으로 위력적인 대정부 투쟁을 건설하기도 힘들다.

현재 중앙운영위원회는 5월 2일과 3일 총투표를 해서 학교의 양보안을 받는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지금부터 학교의 미흡한 양보안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리고 투쟁을 지속·확대해야 한다. 일시적인 채플 거부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정치적 초점을 만드는 대중적인 점거 농성이 필요하다. 청소 노동자들이 점거 농성을 통해 학생들의 지지를 모으고 학교를 압박했던 것처럼 말이다.

지금 학내에서 동아리 연합회, 다함께 이대 모임, 동아리 ‘함께 만드는 변화’ 등이 투쟁을 지속하자는 호소를 하고 있다. “학교의 양보안을 수용할 것이 아니라 교육 투쟁을 지속·확대하자”는 내용으로 유인물 수천 부를 뿌리며 홍보전을 했고 이후에도 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다.

성지현 다함께 이화여대 모임 활동가

고려대

두 번째 학생총회가 준비되고 있다

올해 등록금을 2.9퍼센트 인상한 고려대 학교 당국에 맞서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3월 31일 비상학생총회에서 거점 농성 계획이 통과된 이후 학생들은 본관 총장실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고려대에서 총장실 점거가 벌어진 것은 2004년 이래 처음이다.

농성 보름 만에 학생처장은 “등록금 인상 철회는 불가능하다. 면학 장학금을 10억 원 확충하고 졸업요건에서 한자공인시험 2급 이상을 폐지한다”는 골자로 답변을 내놓았다. 구체적 답변을 주려면 2~3개월은 필요하리란 태도를 바꾼 것이다. 총회 이후 계속되는 농성과 최근 카이스트 사태에 따른 부담감이 이런 답변을 내놓게 한 배경인 듯하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은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고대생 10명 중 1명이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이 철회돼야 한다. 올해 학교의 등

록금 수입은 85억 원이나 늘었는데 장학금 확충액은 겨우 10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

물가 인상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고통이 커져가고 있는데도 적립금 2천3백억 원을 쌓아 둔 학교 당국이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만 하는 것이다.

학생처장은 “4월 17일까지 농성을 해제하지 않으면 약속은 모두 백지화”하며 엄포를 놓기도 했다. 이런 학교 측의 협박에 굴하지 말고 등록금 인상 철회 요구를 하며 더 많은 학생들과 함께 투쟁을 건설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안타깝게도 4월 17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단과대 학생회장들 중 반 이상이 중앙운영위원회가 학교 측이 한 답변을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표결했다. 그러나 중앙운영위원 중 다수는 총회 이전부터 거점 농성에 반대했다. 총회 당일에 문과대 학생회가 현장에서 참가 학생들의 연서를 받아 거점 농성을 발의했고, 총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해 거점 농성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런 중앙운영위원회가 총회에서 가결한 농성을 지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

이에 다함께 고려대 모임, 생활도서관, 문과대 학생회, 동아리 연합회 집행위원회, 한국사회연구회 같은 학내 단체들과 개인들은 비상총회 개최를 요구하는 연서를 받기 시작했다. 고려대 학생회칙에 따르면 6백 명 이상이 연서하면 비상총회를 열어야 하는데, 사흘 만에 8백70여 명이 연서에 동참했다.

조만간 비상총회가 열릴 것이다. 등록금 문제는 살인적 등록금으로 고통받는 학생들과 그들을 자녀로 둔 평범한 노동자들의 문제인 만큼 일관되게 인상 철회를 요구하고 싸우는 것이 필요하다. 비상총회를 성사시키고 더 많은 학생들의 행동을 모아 나가는 일이 과제로 남겨져 있다.

김지윤 고려대 문과대 학생회장

국가고용전략 2020

정규직·비정규직 연대로 맞서야 한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노동 유연성을 확대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국가고용전략 2020’을 추진하려 한다. 정부는 최근 경제정책조정회의와 국무회의 등에서 관련 규정·제도를 도입키로 했고, 곧 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간접고용을 확산할 ‘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도 통과시켰다고 한다.

이것은 가뜰이나 저임금과 고용 불안 등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을 더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지난 2년간 비정규직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조건이 나은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줄어든 반면, 조건이 더 열악한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두 배로 늘었다. 조선업에는 정규직 대비 최소 81퍼센트에서 최대 4백43퍼센트가 사내하청 노동자인가 하면, 자동차 산업 등에도 불법파견 하청 노동자들이 즐비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기간제법’, ‘직업안정법’ 등을 바꿔 기업주들이 2년 이상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는 최소한의 의무도 지지 않을 수 있게 하고 간접고용을 늘릴 수 있게 하려 한다.

또 탄력 근무제를 확대해 고용·임금 불안정성을 높이고, 기업주들이 신규 채

용 없이도 노동자들을 더 효과적으로 착취할 수 있게 만들려 한다.

따라서 이런 정부 정책에 강력한 제동을 걸어야 한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현대차 비정규직 점거파업, 대학 청소 노동자 투쟁의 승승장구, 기흥전자·동희오토 노동자들의 승리 등은 비정규직 투쟁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여 줬다. 민주노총은 이런 가능성을 확대하고 더 넓은 계급적 단결을 조직하며 정치투쟁 등으로 정부에 맞서야 한다.

특히 정규직 노동자들이 연대에 나서

야 한다.

정부와 사측의 비정규직 공격은 결코 정규직과 무관하지 않다.

“정규직의 고용 경직성으로 기업 부담이 증가해 신규 채용이 억제되고 있다”는 저들의 비난은 비정규직 공격의 칼끝이 정규직에 가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원하는 것은 실업과 저임금으로 고통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만을 정규직에게 돌리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현대차 정규직 노조 이경훈 집행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

규직화 투쟁을 외면한 채 정규직의 자녀 취업시 혜택을 주자고 했던 것은 잘못이다.

바로 이런 태도가 보수 언론의 비난을 강력하게 만든 토양을 제공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와 재계는 점점 더 노동자들의 몫을 줄이고 기업주들의 몫을 늘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규직·비정규직이 단결해 모든 노동자들의 고용·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싸워야 하는 이유다.

조명지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일절 받지 않고, 독자·지지자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신문

〈레프트21〉을 후원해 주세요

후원회원 가입하기 문의 02-777-2792 / left21@left21.com / www.left21.com
후원하기 계좌번호 (명약: ㈜ 레프트미디어) 하나은행 296-910007-15804, 국민은행 020601-04-080896,
우리은행 1005-301-422382, 신한은행 140-008-401399, 농협 301-0010-1643-71
웹사이트(www.left21.com)를 방문하시면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ARS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레프트21

우리 모두를 위한 요구

최저임금 25퍼센트 인상하라

최저임금은 원래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 안정”(최저임금법 제1조)을 돕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이 나라의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생활을 파탄시키는 수준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못 받는 노동자들이 1백96만 명에 이른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최저임금이 낮은 국가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은 경제 위기 때 제일 먼저 제일 많이 삭감되고 경제 회복 때는 절끔 오를 뿐이다. 지난해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해 실제로 삭감됐고, 올해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이 동결됐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6.1퍼센트에 이르고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회복했다지만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다른 나라 얘기인 셈이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은 “최저임금의 지나친 인상이 물가상승의 압력”이 되고, “한계기업의 도산 등으로 일자리를 줄이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이 2.7퍼센트로 대폭 낮아졌을 때 오히려 물가 상승률은 2.9퍼센트로 전년보다 높았고, 바로 이때 제조업 등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대거 해고됐다.

지난 10년 동안 최저임금이 ‘가파르



사진 제공: (주)레프트21

4월 13일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민주노총 투쟁 선포식. 최소한 생활할 수 있는 최저임금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할 뿐 아니라, 노동자의 존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게 올랐다’는 저들의 호들갑도 사실이 아니다. 예컨대, 최저임금 인상이 가장 높았던 2005년에 법정 기준 월급 64만 2천 원은 그해 4인 가구 최저생계비 1백 13만 6천 원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피죄명한 수준이었다.

그러니 저임금·고물가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동결” 운운하는 경총

의 주장이 얼마나 분통 터지는 소리겠는가.

따라서 올해 민주노총 등이 최저임금 시급 5천4백10원(일급으로 4만 3천 2백80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 1백 13만 6백90원)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히 정당하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에 견줘 약 25.5퍼센트가 오르는 셈인데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일 뿐이다.

더구나 근래 홍익대를 비롯해 이화여대·고려대·연세대의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점거파업을 통해 최저임금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뒀다. 이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올려 놓은 최저임금의 마지노선을 이제 더 강력한 투쟁을 통해 훨씬 더 높이 올려야 한다.

그러려면 예년처럼 저임금 노동자들

만이 아니라 조직된 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에 함께해야 한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힘있는 행동으로 정부를 압박하며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려놓자. 그것은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높이고 이어질 정규직 임금 인상 투쟁을 위한 효과적인 발판을 마련하는 길이다.

박성환·박설

계속되는 등록금 인상 반대 요구와 투쟁

등록금 인상에 맞선 학생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한 여론조사에서 대학생의 60퍼센트가 ‘등록금 고민으로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할 정도이고, 노동자 부모에게도 등록금이 큰 부담이다. 그래서 등록금 인상에 대한 불만과 저항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인하대 총학생회는 본관 2층을 점거하고 있고, 덕성여대 총학생회도 20일 넘게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고려대 학생들도 총장실 점거 농성을 하고 있고 서강대 총학생회는 대표자 단식 투쟁을 하고 있다.

투쟁을 통해 올해 이미 경희대 학생들은 등록금을 동결시켰고, 동국대 학생들

도 등록금 인상률을 낮췄다. 이런 성과를 이어 여러 학교에서 투쟁이 지속되고 있고 이런 압력 때문에 고려대, 이화여대, 덕성여대 등에서 학교 당국들은 장학금 확충, 학생 복지 개선 등 타협안을 내놔다.

물론 이런 타협안조차 학생들이 투쟁했기에 나왔을 것이다. 그러나 장학금 지급 등은 마땅히 학교가 할 일이다.

더구나 학생들이 제기한 가장 주요 요구는 등록금 인상 철회였다.

해마다 대학생 2백30명이 자살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1년 수입의 절반 가량을 등록금에 쏟아 부어야 하는 끔찍한 현실을 바꾸려면 무엇보다 등록금이 대폭 인하돼야 한다.

따라서, 학교의 타협안을 받아들여서 이쯤에서 학내 투쟁을 정리하고 대정부 요구와 국회의원 서약 운동 등으로 전환하려 해서는 안 된다. 등록금 투쟁을 정리하고 메이데이 조직과 노동자 투쟁 연대에 나서자는 생각도 온당치 못하다.

이는 등록금 투쟁은 으레 반짝하다가 끝나기 마련이라는 냉소를 퍼뜨리고,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는 대정부 투쟁도 더 대중적으로 발전시키기 힘들다.

또 메이데이의 진정한 의미를 기리기 위해서도 등록금 투쟁을 확대하면서 메이데이와 연결시켜야 한다. 등록금 문제는 경제 위기 고통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 대다수 학생들은 현실에 큰 불만을 갖고 있지만 집단적인 행동으로 이를 바꿀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이 충분치는 않다.

따라서 좌파적인 학생 활동가들의 구실이 중요하다. 학생 활동가들은 등록금 인상을 정당화하는 논리들을 반박하고 등록금 인상이 왜 노동계급에 대한 공격

인지를 폭로하며 등록금 인상의 대안을 제시해 학생들의 자신감을 높여야 한다.

또 학생들의 불만과 분노를 대중 행동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전술을 제시하며 투쟁을 중단없이 발전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정선영

» 관련기사 15면

카이스트 학생이 말한다

“서남표 총장은 퇴진해야 합니다”

이번에 여러 명이 죽었다는 것이 너무 슬퍼요. 이게 남의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는 학생들의 공부를 위한다고보다는 기업의 연구를 위해 경쟁을 시키고 몇 명만 남기는 방향을 택하고 있어요. 학점으로 사람을 줄 세우고 돈으로 압박한다는 건 정말 비인간적이지요.

사실 공부를 할 만한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돈을 내야 한다는 공포를 가지고 사람을 통제하는 거니까 굉장히 나쁘죠.

영어 강의도 학생들의 교육보다는 대학 순위를 위해 도입했어요. 동아철학 같은 과목도 영어로 하는데 전면 영어강의를 실시하려고 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았어요. 영어강의 비율이 대학 평가에서 차지하는 게 있으니까 그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총장이 두 번의 대화에서 보인 태도가 학생들의 의견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일단 다루기 쉬운 대상으로만 보여군요.

저는 서남표 총장이 퇴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학생총회를 앞두고 총장 퇴진 서명 운동을 했었어요. 총장 퇴진 서명을 함께 받은 사람들은 원래 서로 몰랐는데 ‘총장과의 대화’ 자리에서 알게 됐어요. 총장의 비민주적인 태도를 보면서 퇴진 서명을 받기로 했죠.

카이스트 문제가 구조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해도 서남표 총장은 그것을 추진한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고 있고, 학생들의 목소리는 전혀 듣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자기 힘으로 직접 서남표 총장 퇴진을 이

끌어 낼 수 있다면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카이스트에서 시행된 잘못된 제도가 다른 학교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서남표 총장이 퇴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비록 총회에서 퇴진안을 발의하진 못했지만] 퇴진 서명을 받았던 사람들이 앞으로도 함께하려고 해요. 카이스트에서는 대자보를 쓰거나 팻말을 드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구상 단계이기는 하지만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대자보로 붙이거나, 서명을 받고 팻말을 들고 해도 괜찮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요.

김치현 카이스트 수학과 4학년

인터뷰·정리 정선영

» 관련기사 12면

여러분의 정기구독과 후원으로 지난 2년 동안 기업 광고 전혀 없이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

레프트21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구독 신청: www.left21.com, 02-777-2792

정기 구독료 (우편료 포함) 1년 (26개 호) 5만 원 | 2년 (52개 호) 10만 원

임금 계좌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하나은행 296-910007-15804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 우리은행 1005-301-422382 / 신한은행 140-008-401399 / 농협 301-0010-1643-71

- 구독 기간 중에 구독료나 우편료가 올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레프트21에서 만난 진실을 널리 전하고 싶다면, 한 부를 더 구입해 주위에 소개해 주세요. 자본과 권력에 맞선 저항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길입니다.